

碩士學位論文

# 동아시아 사회의 구조와 변혁 — I

(東亞社會的結構與改革— I) 韓國語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中科

金賢淑

2010年2月

# 동아시아 사회의 구조와 변혁 — I

(東亞社會的結構與變革— I) 韓國語 翻譯論文

指導教授 金 中 燮

金 賢 淑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金賢淑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趙 成 植 ㉠

委 員 金 中 燮 ㉠

委 員 宋 咳 宣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0 年 2月

# 목 차

## 제 1 편 관념의 변혁

### 역자서문

인권과 아시아의 만남.....텐허 (田禾)

1. 이론의 충돌: 서양과 동양의 만남.....1
2. 인권이 주권의 우위에 있는가, 주권이 인권의 우위에 있는가?.....5  
:인권과 주권의 만남
3. 문화상대주의: 개인과 집단의 만남 .....10
4. 아시아의 인권 선택: 빈곤 퇴치는 인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 ..... 14

동아시아 지역 의식의 원류(源流)·발전 및 현대적 의의.....천평린(陳奉林)

1.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원류.....23
2.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발전.....28
3.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현대적 의의 .....33

동북아 단일화 과정의 부정적 감정요인 .....류샤오린(劉少林)

1. 동북아 단일화 과정의 현실요소와 발전과정.....36
2. 감정변수와 동북아 단일화.....38
3. 시사점과 결론 .....43

한·중·일 대학생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선호 .....양바오윈(楊保筠)

1.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정 .....45
2. 전통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선호 변화.....49
3.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선호에 대한 문제.....55

한·중 국제결혼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충돌 .....첸신즈(全信子)

1. 한·중 인적교류와 국제결혼의 발생.....59
2. 한·중 국제결혼 중의 문화적 정체성 .....61
3. 한·중 국제결혼의 문화적 충돌 .....65

## 역자서문

본 번역문은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학술연구 논문 모음집에서 『제 1편 관념의 변혁』 부분에 실려 있는 다섯 편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역자가 역자가 번역한 다섯 편의 논문들은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동아시아 사회의 관념적인 특징과 문제점들을 꼬집고 있다. 중국인의 시각으로 써 내려간 논문들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하지만 편협한 시각에서 논문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우리와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를 것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의 내용은 인권은 무엇이며, 서양과 동양이 인권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사회의 지역 의식의 태동과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동아시아 역내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기술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동북아 단일화 과정의 장애 요소를 표면적인 것이 아닌 심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며 기술하고 하고 있다.

네 번째 논문은 한국, 중국,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선호 변화를 객관적 자료로 수치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다섯 번째 논문은 중국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과 그들이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생기는 문화적 충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 동아시아 사회의 관념적 요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전체적인 내용이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중국 중심의 사고방식이 많이 드러나는 내용들이며, 문장 중 사용된 인용부분이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 번역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관념적인 내용들인 “人權觀”, “認同”, “情感” 등은 전체적인 문장 내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번역하는 데 혼동을 가져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어휘를 통일 시켰다. 전체적인 내용은 실제 통·번역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큰 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인권과 아시아의 만남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텐 히(田禾)

서방사회와 아시아는 인권 개념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인권과 주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 개인과 집단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등이 그것이다. 현재 국제구도로나 세계 부존자원으로 보나 혹은 역사·문화·전통으로 보나 아시아는 서방의 모델을 그대로 따를 순 없다. 인권분야에 있어서 아시아는 서방세계와는 전혀 다른 발전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한 서방세계와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

## 1. 이론의 충돌: 서양과 동양의 만남

이론적으로 인권의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다르다. 오늘날 널리 유행되고 있는 인권의 개념은 서양에서 시작됐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존 로크(John Locke), 몽테스키외(Montesquieu),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체사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존 밀러(John Miller) 등 유럽 정치와 법률 사상가의 사상은 인권 이론을 탄생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국가, 시민과 정치 권리의 탄생을 촉진시켰으며 많은 국가들에게 식민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하도록 고무시켰다. 서양의 인권관은 대체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법제 ② 참정과 의정, 즉 민주 ③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 주는 선택 가능한 경제적 자유 ④ 사상, 정신 혹은 의지의 자유. 정치권은 서양 인권의 주요 내용이

다. 심지어 일부 극단적인 서양 인권론자들에게 있어 개인의 정치적 권리는 지고 지상의 개념이다.

만약 이런 서양의 원칙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동양 문화는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동양 문화는 인권의 내용을 배척한다고 보았다. 그들의 단순하고 독선적이며 배타적인 사고방식은 문화와 역사·전통의 차이로 인해 인권의 표현방식과 내용이 다를 수 있음을 부정한다. 사실,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곧 인권을 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 동양에서도 인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인권에 대한 탐색은 있었다. 중국의 예만 보더라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개념이 근대 서양에서 생겨나기는 했지만, 오랜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중국 문화는 자신만의 독특한 인권 관념과 전통을 만들어냈다. 중국 유교에서는 인간의 도리, 인(仁)과 애(愛)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여겼다. 또한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나중에 생각한다(先人而後己)’,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을 서게 하며, 자기가 이루고자 하면 남을 이루게 한다(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자기가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己所不欲, 勿施於人)’등을 사람으로서의 기본 신념으로 삼았다. ‘세상은 만민을 위한 것(天下爲公)이며,…… 사람들이 제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으며, 제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으며, 노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일생을 마치도록 하고, 젊은이가 제 능력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며, 아이들은 잘 자랄 수 있게 하고, 홀아비나 과부, 고아와 무의탁자, 늙고 병든 자도 모두 잘 살 수 있게 한다(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 皆有所養)’라는 집단적 인도주의 사회이상과 ‘백성이 귀하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君爲輕)’라는 민주 사상은 사람들에게 천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공익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며, ‘천하 사람이 근심하기 전에 먼저 걱정하고 세상 사람이 즐거움을 누린 후에 즐거워한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라는 전통 미덕을 북돋웠다. 봉건 전제제도 통치하에서 이러한 집단적 인도주의 사회상이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문화에 인권사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다.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동서양이 인권을 보는 관점이 다소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일

치하는 점도 있다. 즉 인권의 본질은 같은 것이며, 인권의 표현방식만 다를 뿐이다. 인권 자체는 여러 단계로 나뉘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모두가 인정하고 보편적인 권리인 생명권, 생존권 등이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흑형, 노예제도, 유괴, 살인 등의 행위는 있어선 안 된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사회·정치·경제와 문화적 측면의 권리이다. 기본권 외에도 모든 권리는 평등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의 권리는 기본권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 역시 매우 중요하며 이 권리가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적용되는데 인권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인권의 보편성과 두 번째 단계의 각종 인권이 평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인권이 특정한 조건과 유리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 상황에서 개별적 권리는 더 부각되고 중요시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저개발 혹은 낙후한 지역의 가난에 비적 마른 사람들과 배불리 먹어 불룩한 배를 가진 뉴욕 시민들과는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는 비서방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난할 때 경제, 민족, 문화 등의 차이를 소홀히 하는 위험한 경향을 보인다. 많은 서양인들에게 있어 모더니즘은 곧 자유와 번영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3세계 사람들에게는 이는 경제적 박탈, 자원의 손실, 때로는 사회분열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인권은 도덕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요소만 고려해서도 안 된다.

냉전시기에 동서 진영간 인권에 대한 대화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방 세계는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강조하며 언론의 자유, 다른 정치적 견해 발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등의 권리를 강조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사회·경제적 권리, 특히 노동과 관련된 권리를 강조하며 양 진영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냉전의 종식은 서방의 가치관(예를 들면 자본주의, 민주와 인권)이 승리한 것처럼 비춰졌다. 뜨겁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방의 인권론자들은 전도사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개발도상국들의 인권상황을 호되게 비난하며 서방의 인권관을 전 세계에 알리려 했다.

냉전종식 후 유엔도 세계 인권대화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며 유엔총회에

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에 나섰다. 유엔 비엔나 총회 전 지역별 유엔 준비회의가 개최되었다. 1993년 아시아 국가는 방콕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인권상황에 대한 서방세계의 비난에 대응하고, 내부소요 방지와 부정적 국가 이미지에 놀란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방안 등 실질적인 이익부문의 요소를 고려하여,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체계적인 아시아 인권관을 제시했다. 당시의 회의는 유엔의 환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방콕회의는 『방콕선언』<sup>1)</sup>, 『베이징 인권백서』, 『싱가포르학과』 등 일련의 문서와 관점들을 세계에 선포하며 서방세계에 일침을 가했다. 그것은 동아시아와 동남아 국가들이 서방의 ‘인권대학살’식 인권정책을 거부한 것으로써, 동서양의 인권관이 새롭게 충돌한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충돌이라는 꼬리표를 남겼다.

동서양의 인권에 대한 견해차는 다음의 내용에서 볼 수 있다. 국제적 책임과 국가 주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중 어느 것이 더 실질적인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적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하는가 등이다. 서방의 전통적인 인권 개념은 18세기와 19세기 계몽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정치와 시민의 권리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동양의 개발도상국들은 역사적 이유로 경제와 사회적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서구식 인권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방 사회가 만든 구조에만 적용될 뿐, 인권은 주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아시아 인권관의 탄생은 아시아 국가가 현재의 국제관계에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시아 인권관의 탄생은 아시아의 부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서방국가들이 거만하고 독단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현재 세계무대에서의 인권정치는 서방사회가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제 인권정치는 평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충돌이 아닌 협력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인권 분야에서 국가주권은 여전히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하며 모든 국가들이 자율적으로 경제

1) 『방콕선언』:1993년 아시아 국가들이 방콕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49개 아시아 국가들이 『방콕인권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의 인권관을 제시했다.



사회와 경제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 2. 인권이 주권의 우위에 있는가, 주권이 인권의 우위에 있는가?

:인권과 주권의 만남

인권 문제를 논할 때, 인권과 주권 중 어느 것이 우위에 있는가는 줄곧 논란이 되어 왔다. 민족국가 여전히 국제정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세계화의 물결이 민족과 국가에 큰 영향을 주면서 포스트 베스트팔렌 시대를 조용히 앞당겼다.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정치·문화적 주권을 약화시켰다. 어떤 학자는 분리는 세계화 시대 국가 거버넌스의 특징이며, 이는 단일정체(政體)가 더 이상 어떤 활동과 이익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국가주권이 설사 붕괴되지 않았다 해도 국가 통치능력은 변화 중에 있다는 사실에서 분리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때문에 국내외 현안, 국내외 정치문제의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sup>2)</sup>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각종 국가이론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민족국가 종말론, 국가주권 낙후론, 국가주권 약화론, 국가주권 다원론, 국가주권 강화론, 세계정부론, 신제국주의론 등 아주 다양하다. 어떠한 관점이든 민족국가의 주권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중, 인권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신제국주의론이다. 전통적인 제국주의는 종주국의 속국, 식민지와 식민지 사람들에 대한 통치와 착취를 말한다. 경제 글로벌화로 제국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여 신제국주의를 만들었다. 신제국주의는 서방 선진국들이 국가주권의 존재를 무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확장과 금융 독점을 추진함과 동시에 그들의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 신제국주의의 특징은 ‘주권 개념의 낙후함’, ‘반테러’, ‘국가무용론’을 내걸고 패권을 모색하는 것이다. 신제국주의의 이론적 기반은 인간의 이익이 국가이익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권이 주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sup>3)</sup> 신제국주의의 대변인은 심지어 테러리즘에 대한

2) David Held and Anthony McGrew, *Governing Globalization*, Polity Press, 2002, pp.305~324.

대답은 식민주의이며, 약소국의 자주권을 강대국에 넘기고 민족국가에서 지역 국가의 길을 가는 것이 현재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한다.<sup>4)</sup> 신제국주의 이론은 국가주권 이론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매우 위험천만한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체가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해 통제된다면 거버넌스 규칙도 대부분 서방 세계가 제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내정간섭은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주권과 인권 논쟁에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하다. 첫째, 서구식의 인권 이론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서구 인권이론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서양 인권이론을 유일한 열쇠로 삼는다면 바로 신제국주의와 같은 이러한 이론에 길을 내주게 돼 세계가 다시 한번 약육강식의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의 확실하고 규범화된 국가간 기본 법칙이 필요하며, 이러한 법칙이 없다면 인류는 전국(戰國)시대 같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히틀러가 내세운 ‘생활권 이론’, 일본군의 ‘대동아공영권 구축’이라는 정책은 아직까지도 인류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들이다. 피해국들에게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무슨 인권을 논한단 말인가. 일부 학자는 다른 각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며 이것이 곧 국가 주권을 제한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한다. 정부가 자국민의 인권을 침범하거나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범하는 것 모두 용서받지 못할 행위이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세계화가 민족국가에 어느 정도 위협요소가 되기는 하지만 국가주권 이론이 여전히 국제법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주권과 인권은 똑같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유엔 헌장에는 “국제협력을 실현하여 …… 인권 존중과 서로 다른 민족·성별·언어와 종교를 가진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촉진하고 격려한다.”<sup>5)</sup>고 지적했다. “헌장은 유엔에게 각 국 내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며,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사무를 유엔에 제기하여 현

3) 俞可平: 『世界化与國家主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년, p.20.

4) 俞可平: 『世界化与國家主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4년, pp.20~21.

5) U.N. CHARTER, art.1, para.3.

장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국가의 직무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단순한 권리 관계만 있을 수 없으며, 개인과 집단, 권리와 권력은 긴밀히 연결되어 어느 정도 복잡성을 드러낸다. 국가와 개인이 단순한 권리 관계라고만 보는 관점은 세계 발전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인권존중과 보장을 핵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치 상황과 국가 사회발전 과정의 가치와 제도적 특징에 달려있다.

실제로 국가의 전통이 다르면 현실제도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를 처리할 때의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농업경제, 자연경제에서 산업경제와 상품경제로 바뀌고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법률구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는 사회 경제구조 및 경제구조의 제약을 받는 사회의 문화발전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sup>6)</sup>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은 아직까진 완전하지 않지만 이것은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때문에 서방국가는 이를 이유로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구실로 개발도상국에 사회불안을 야기해서도 안 된다.

국가주권과 인권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세계화된 환경에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정치권력의 주체이고, 영토는 국가를 나누는 가장 기본이 되며,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체성이며, 국가의 시민권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신분자격이며 국가이익도 여전히 가장 근본적인 정치이익임을 볼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강화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 및 미국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취하는 일방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1977년부터 미국 국무원은 거의 매년 『각 국 인권보고서』<sup>7)</sup>를 발표하여,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자신의 소프트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 자신조차 인정하듯이 인권외교는 미국의 건국가치와 오랜 전략적 이익 때문이며, 이에 궁극적 목표는 미국의 이익을 유지·보호하는 것이다. 미국 『독립선언』과 헌법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것들이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미국의

6) 馬克思(마르크스) : 『哥達綱領批評』, 1974년, p.14.

7) 2000년, 2001년 미국은 중국을 비난하는 『인권보고』를 발표하지 않았다.

국가이익을 연계하며 신을 대신해 그 가치를 전파한다고 할 때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원래의 뜻을 잃어버렸다. 미국은 자국의 주권을 단단히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며 열화우라늄탄과 클러스터폭탄으로 미국의 가치관을 전파하고 약소국의 주권을 짓밟는 아주 위험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권과 인권의 관계에 대해 아시아 국가와 서구세계의 인식은 다른 점이 있다. 과거 100여 년 동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 짓밟히고 억압당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독립과 내정불간섭 원칙은 완전히 이해가능하고 합당한 것이다. 과거 억압을 받았던 나라들에게 국가주권은 특히 중요하다. 국가가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라크인들의 생명권과 미국인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하는 문제에 있어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 외에,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자국 영토의 안전만을 수호할 뿐, 민주든 자유든 어떠한 도의적인 명분에서도 다른 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도 의무도 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미국이 이라크에서 죽은 미국인들의 죽음은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서,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은 이라크인들은 방치해 두며 관심과 고려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이라크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이 폭탄과 테러에 목숨을 잃고 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런던에서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는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50여 명의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것은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서방사회가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국의 안전과 국가이익이고, 둘째가 인권과 민주 등의 보편적 원칙이며, 셋째 혹은 그 밖의 사항이 바로 타국의 주권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쟁은 지금껏 줄곧 강대국의 이익 추구와 약소국 착취를 위한 도구였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전제(專制)'의 이름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아시아와 서양의 200여년에 가까운 역사 과정에서도 실제로 볼 수 있다. 어느 한 미국 학자는 서방의 대외 확장을 비난하면서 “서양의 welfare는 warfare를 이용해 실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서양의 사회복지가 전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마치 조롱이라도 하는 것 같지만 서양의 발전사를 돌아해보면 이 말은 사실상 매우 의미심장하다.

인권을 빌미로 한 서방 사회의 내정간섭을 막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원

칙을 고수했다. 중국은 『1991년 중국 인권백서』에서 어떤 국가든 인권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 이데올로기, 정치적 잣대, 발전모델을 펴트리는 것을 반대하며 인권을 빌미로 타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더 더욱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주권·존엄을 해치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 내부의 인권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문제라고 밝혔다. 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널리 인정하는 원칙이며, 거의 모든 국제관계 분야에 적용된다. 물론 인권관련 분야에도 적용된다. 『방콕선언』도 국제정치적 기층 인권관에 반대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존중과 영토보전을 강조하며 그 누구도 타국의 내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인권을 빌미로 타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은 자국의 주인으로서 자국에 맞는 정치제도를 선택하여 국가의 천연자원을 통제하고 자유롭게 배분하며 독자적인 사회·경제·문화적 발전모델을 찾아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물론, 강조할 점은 세계화된 환경에서 적절한 주권양도와 주권상실은 다른 개념이다. 세계화시대에 국가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권관을 수립해야 한다.<sup>8)</sup> 그것은 한편으로는 주권의 신성불가침성을 견지하여 어떠한 이유에서든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며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국제적 압력을 막아 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국가권력이 자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할 수 없게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권은 국가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마지노선이다. 국가가 흑독한 통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한다면 더 이상 합법적인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사회의 비난 심지어 제재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떠한 각도에서 보든 하나는 분명하다. 주권은 사실상 인권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인권은 주권의 매개체이며, 껍데기뿐인 주권과 절대적인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은 주권이 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주권의 독립과 보전은 인권을 보장하고 시행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과거 억압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주권이 없다면 인권은 보

8) 王逸舟: 「樹立世紀之交的新主權觀」, 『歐洲』, 2000년, 29호, pp.8~11.

장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이 없다면 주권도 구현될 수 없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다.

### 3. 문화상대주의 : 개인과 집단의 만남

근대로 접어들어 동양이 서양보다 뒤처졌다는 이유로 서양 중심론의 편집광들은 서양 문명이 도덕적 의미를 갖는 유일한 문명이고, 그 밖의 것은 모두 야만적이고 낙후된 것이라며 열광적으로 서양의 문명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를 신이 부여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양 문명과 기타 문명의 다른 점은 발전의 차이가 아니라 가치강령과 체제의 특별함에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다윈주의, 개인주의와 법치 등이며, 이러한 것들이 서방 사회로 하여금 현대성을 창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른 사회의 부러움의 목표가 되게 하였다……서양 문명의 가치는 보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특별함에 있다.” 하지만 세계화된 환경에서 미국이 비서구 문화의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면서 서방 국가들은 “서양 문명의 유일무이한 특성을 보존·수호·부흥”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미국은 서방 초강대국으로서 “이 책임을 아메리카합중국과 두 어깨에 짊어졌다.”<sup>9)</sup> 이는 새로운 환경하에서의 유토피아적 환상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제구도로 보나 부존자원으로 보나 혹은 역사·문화·전통으로 보나 아시아는 서방의 모델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서방의 모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선진국에 반드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는 서방 세계와는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한 찾아야만 한다.

인간의 본성은 모종의 문화적 상대성을 지니며, 문화상대주의는 아시아 인권관의 주요내용이다. 문화적 차이는 한 국가의 국내외 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정체성은 냉전 후 세계를 결집·분열·갈등하게 했다. 포스트 냉전시

9) 賽繆爾·亨廷頓(새뮤얼 헌팅턴) : 『文明的冲突与世界秩序的重建(문명의 충돌)』, 新華出版社, 1998년, p.360.

대에 사람과 사람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데올로기나 정치 혹은 경제적인 것이 아닌 문화의 차이이다.<sup>10)</sup> 서방이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보는 것과 달리 아시아 문화는 독특한 아시아적 가치를 만들어 냈다. 아시아 국가 특히 유교를 신봉하는 국가들은 집단 인권을 개인 인권의 우위에 두며 법치에 사회적 이익이 있다고 여겼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권이론은 특별한 역사적 환경의 권력구조를 반영한다. 아시아 문화는 아시아적 통치방식과 도덕적 권리가 합법성을 갖는 주요 근원이 된다. 유교에서 파생된 싱가포르학파는 집단주의 문화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정부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한다.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 안정 사이에 균형점을 찾아야한다. 균형점은 모든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시간이 흐르면서도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사회 안정을 위하는 길이라고 인식했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아시아 인권관의 주요내용이다. 싱가포르학파는 권위에 대한 존중이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국민에게 관심을 갖는 지도자에 대한 존중<sup>11)</sup>이라고 생각했다. 지도자는 인간됨·학식·도덕적 기준에서 일반인을 능가하는 군자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여겼다. 서구사회에서는 줄곧 정부를 피할 수 없는 악(Inevitable evil) 혹은 필요악(Necessary evil)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시아 사회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인정치이다. 현인들은 완벽한 자아인격을 가지고 사회집단을 책임진다. 바꿔 말하면, 지도자의 정치적 책임감과 개인의 도덕적 소양이 서로 보완해 가며 각각의 장점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면, 정부는 일자리, 고용, 교육과 의료 등에 있어 공정하고 인도주의적으로 자국민을 대하고, 반대로 국민들은 법을 준수하고 이러한 권위를 존중하며, 근검한 생활을 하고 아이들이 발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싱가포르학파는 민주가 아닌 ‘좋은 정부’가 경제발전의 결정적 요소이며 외국 원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여겼다. 좋은 정부는 시민사

10) 賽繆爾·亨廷頓(새뮤얼 헌팅턴) : 『文明的冲突与世界秩序的重建(문명의 충돌)』, 新華出版社, 1998년, p.6.

11) Lee Kuan Yew, Speech at the inaugu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ucianism Association, at Beijing on 5 October 1994, Senior Minister's speeches, interview, statements, etc, 1994.

회를 만들고 주변국가와 우호적으로 지내며 국제법과 국제행위 준칙을 준수한다. 또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질서, 자유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권위주의 정부는 대중 여론 혹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무엇이 국민들에게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며 이를 근거로 정책을 제정한다. 민주와 인권 모두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것은 민주와 인권이 아닌 좋은 정부라고 보았다. 좋은 정부는 반드시 선거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도자는 반드시 재덕(才德)을 겸비하고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때문에 아시아인의 좋은 정부는 반드시 인권보호 분야에 최고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는 반드시 성실하고 효과적이며 능력이 있어야 한다. 좋은 정부는 간혹 민주와 자유를 규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회혼란을 일으킨 종교극단주의자를 무력으로 진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종족 간 긴장과 사회분열을 방지한다.

중국도 문화의 다양한 관점에 긍정적이다. 중국에서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던 사형제 존폐 문제는 문화상대주의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분야에서 중국과 서방의 의견차가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논리는 인간의 생명권은 하늘이 준 권리이므로 어떠한 개인 혹은 정부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사형제는 비인도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며, 개인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재난이라고 보았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에게 집단의 이익과 인권은 관심 밖이며, 생존권과 발전권은 더 더욱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형제 존폐 여부는 한 민족의 문화심리, 사회제도와 연관돼 있다. 서방 세계는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각시키면서 프랑스 대혁명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박애 중 평등과 박애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소위 박애는 공동체(Community)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서방 세계에서 박애는 이제까지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반대로 동방사회는 공동체 보호에 있어 서방사회에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제공하고 있다. 유교가 집단의 생존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동방사회는 생명, 집단의 생명과 개인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 서방 세계와는 달랐다. 공자는 ‘인간을 사랑하라(愛人)’,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라(務民之義)’, ‘널리 베풀어 백성



을 구제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런 까닭에 공자는 '예(禮)'를 가장 중시했다. 때문에 '예'는 곧 집단의 생존구조가 사회규범에서 구현된 것이며, 오늘날의 '게임의 법칙'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상 집단의 생존법칙인 것이다. 유교사회의 이상은 '대동(大同)'으로 집단의 생존이 최적인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문화가치관은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숭배하는 서양 문화와 큰 차이를 보이며, 더 나아가 사형제 문제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형은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시행돼 오면서 중국문화 중 누적된 것이 가장 많은 제도이다.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고, 빚을 지면 갚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비록 이러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은 대다수 중국인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만약 전국에 걸쳐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여론 조사를 한다면 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간단히 폐지해 버린다면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현재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인권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 이는 피해자의 인권은 영원히 사라져 버린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만을 보호한다고 받아들여진다. 만약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전통적인 법률 문화는 인권 혹은 인도주의가 아닌 공평·정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바로 중국인의 이러한 심리를 잘 충족시켜 주었다. 만약 한 정책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진정한 지지를 얻기 힘들다. 국민의 인정 혹은 묵인, 국민의 수용과 준수는 정책의 합법화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sup>12)</sup> 즉 현대 법률의 제정은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사형 제도를 야만적이라며 비난하면서도 이상하게 서방국가가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명'이라는 월계관을 씌우며 미화시킨다. 이런 '문명'적인 전쟁과 비교해 보면 사형은 정말 문명적이다. 사형은 최소한 법의 틀 안에서 일정한 절차로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하지만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병사들에게 떠넘긴다. 열화우라늄탄과 강철괴물에 의한 생명파괴는 인성(人性)의 범위

12) 伍啓元：『公共政策』 (상권), 台灣商務印書館, 1985년, p.7.

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은 생명들이 최소한의 인권 의식을 환기시켰는지 모르겠다. 이런 국가들은 “다른 나라에 로크를 전파하면서도,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니체를 감춰뒀다.”<sup>13)</sup> 폭력으로 어떤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은 인류사회의 기본준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 마치 현재 우리가 이라크를 보는 것과 같다. 일부 낙관론자들은 이라크가 앞으로 서구적인 특징을 갖는 ‘민주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하지만 문화적 정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사명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동방문화의 모든 변화와 발전은 토착적 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토착주의’적 입장은 절실한 태도를 보인다.<sup>14)</sup> 서방 국가는 동양 사회의 인권을 비난하기 전에 우선 토착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인권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는 주권을 상실한 것”이라는 관점은 비이성적이다.

#### 4. 아시아의 인권 선택: 빈곤 퇴치는 인권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정

문화와 마찬가지로 인권은 역사적 산물이다<sup>15)</sup>. 인권은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발전하면서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 인권 개념은 세 단계로 발전했다. 1단계는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과 1791년 헌법 수정안 및 프랑스 『인권선언(1789)』이 대표적이다. 이 시대의 인권은 강렬한 개인주의 색채를 띠며 국가의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소극적 권리(Negative Rights)’라고도 부른다. 2단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1966년 체결, 1976년 발효)인 ‘국제인권헌장’이다. 이때는 국가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여 ‘적극적 권리(Positive Rights)’라고도 한다. 3단계는

13) 許向陽：「人權的普世價值與超級大國的戰略利益」, 『學海』, 2004년 4호.

14) ‘토착주의’의 입장은 경험과 이론의 관계에서 출발해 중국문제를 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서방의 이론과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경험의 인식과 파악으로 이론을 결합한 것이다. 서방의 사형제 폐지이론은 우리가 이론을 만들 때 하나의 참고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만드는 것 자체는 여전히 토착화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

15) 肖巍·錢箭星：「人權與發展」, 『夏旦學報』, 2004년 3호.

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리킨다. 알제리의 정의와 평화위원회 보고서인 『후진국의 권리(1969)』에서 처음으로 발전권의 개념이 제기됐다. 1977년 유엔인권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이것을 기본인권에 포함시켰다. 1979년 인권위원회는 발전권은 국가권리이자 개인 권리임을 재천명했다. 1986년 제 41차 유엔총회에서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통과시키면서 체계적으로 발전권을 정립시켰다. 1990년 이후 유엔은 매년 결의 형식으로 발전권을 재천명한다. 발전권 외에 유엔은 ‘평화권’, ‘환경권’, ‘인도적 지원권’ 등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집단적 인권으로서 ‘연대권(Rights of Solidarity)’이라고도 부른다.

1단계 인권의 기본 고려대상은 개인으로서, 개인의 권리를 도의적으로 가장 우선시 했다. 2단계는 이것 외에 정부가 개인이 경제적 사회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포함한다. 3단계는 앞의 두 단계에 걸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새로운 형식의 연대관계가 있는 국가와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인권의 핵심이자 인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식했다. 그 중 생존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었다. 개인과 민족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생존권은 자연스럽게 생명권의 전제가 되며, 또한 생활보장권을 포함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생존권은 곧 생명권이며 개인 생명이 살해당하지 않고 침해받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인권의 다른 내용은 반드시 생존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전권은 국가와 민족이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고루 발전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발전권의 핵심은 경제발전이다. 각 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통문화, 자연조건과 발전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발전계획을 정하고 목표를 수립하며 발전단계를 설정할 권리가 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등한시하며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모델 혹은 기준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고 비현실적이다.

발전권은 생존권의 자연적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역사와 현실에 기초하여 제기된 합리적인 요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개발도상국은 민족독립의 길을 걸어갔으나 여러 이유로 선진국 경제에 종속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

며, 과거의 경제 질서가 여전히 넘어설 수 없는 장애 요소로 남아 있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치독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여러 국제무대에서 경제발전의 권리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1986년 12월 제41차 유엔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이 채택되었다.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권은 박탈할 수 없는 인권이며, 전 인류는 경제·사회·문화·정치적 발전에 참여하여 이를 촉진시키고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발전과정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충분히 실현된다. …… 인간의 발전권은 민족자결권이 충분히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인권에 관한 두 가지 국제규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제약을 받으면서, 모든 천연자원과 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발전권의 제창은 생존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생존권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생활권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경제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을 개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발전권을 인권의 기본으로 정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수십 년 동안 노력한 결과이다.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은 발전권이 집단 인권이자 개인 인권임을 인정한 것으로 인권 개념의 큰 발전이다. 집단 인권의 주체는 국가, 민족과 지역이다. 집단 인권은 반드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오늘날 집단 인권은 이미 국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생존권과 발전권은 개인의 권리이자 집단의 권리이다. 이것이 실현됨으로서 개인은 생명의 안전, 생활보장과 개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민족 혹은 국가는 차별과 침략, 착취당하지 않고 민족의 정치, 경제와 사회발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개인의 운명은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전권은 민족자결권의 연장이므로, 국가와 민족이 세계라는 곳에서 독립되어야만 국민이 비로소 발전권을 누릴 수 있다. 독립권, 민족자결권, 생존권과 발전권은 모두 광의의 생존권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권리를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단의 권리로서 인권 중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국백서』에서는 인권을 각 국의 역사, 사회, 경제와 문화적 환경의 제약을 받는 역사 발전의 과정이라고 인식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 사회제도, 전통문화와 경제발전의 차이로 인해 각 국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도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인권을 판단할 때 그 역

사와 민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똑같이 요구할 수 없다. 인권에 관한 국제간의 대화는 공통점을 취하고 이견은 잠시 보류하며, 상호 존중, 이해증진과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전권은 우선 중국의 구체적 상황과 모든 중국인의 기본권익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인권 백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실현에 있어 유엔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과 발전권이 가진 현실적 중요성은 개발도상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sup>16)</sup>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책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국민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국민 삶의 질을 개선시켰는지 여부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권의 외침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싱가포르학파는 경제발전은 싱가포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경제성장은 국가생존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았다. 질서와 안정은 경제발전과 투자자 유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를 인권과 바꿔서는 안 된다고 여겼다. 법과 질서안정이 보장되어야만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싱가포르 대로를 다닐 수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학파는 ‘개인의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적절한 확대가 필연적으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관점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들은 서방의 집회와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경제발전에 이롭지만은 않다고 여겼다. 60~70년대 한국과 타이완의 ‘권위주의 정부’는 서방 세계의 인권과 도무지 맞지 않았다. 한국과 타이완이 서방의 인권정책을 시행하면서도 경제가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경제발전은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제3세계를 해방시킬 유일한 힘이다. 경제발전만이 더 많은 국민들이 사회와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서방국가가 개발도상국가에게 소위 말하는 서구식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촉진해야지 막아서는 안 된다.

『방콕선언』도 같은 생각을 표명했다<sup>17)</sup>. 『방콕선언』은 국제적 인권 메커니즘

16) “Part 1: The Right to Subsistence-The Foremost Human Right the Chinese People Long Fight For”, Human Rights in China, <http://www.chinaguide.org/e-white/7/index.htm>, 1991(hereinafter 199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17) 1993년 세계인권총회 비엔나 회의 전, 각 대륙에서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지역은 1993년 3월29일부

이 인권의 일부인 시민의 정치적 권리만을 논하기 때문에 매우 부족하다고 여겼다. 경제·문화·사회·시민과 정치적 권리는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로서, 모두 똑같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남북차이, 빈곤 등은 모두 개발도상국의 인권 실현에 영향을 주는 객관적 요소들이다. 국제사회는 통일된 인권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계적 차원에서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야만 민주가 향상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선언』은 서방의 이중 잣대가 국제 인권운동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며 인권을 촉진하기 위해선 충돌과 제재가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외, 동남아 각 국은 1993년 유엔 비엔나회의에서도 각자 자국의 인권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권이 비록 많은 국가들에게 탈식민투쟁을 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기는 했지만 인권 역시 서양 사상가들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권 개념의 충돌은 서양의 두 전통간의 충돌이다. 즉 제퍼슨의 개인의 자유 원칙과 해밀턴의 강력하며 합법적인 권위 원칙의 충돌이다. 서방 국가는 비서방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인권외교를 반대했으며 인권을 발전 협력의 정치적 선결조건으로 보는 것에 반대하며 모든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인권의 보장은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 경제 질서의 구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의 인권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권정치, 선택적 사용, 이중 잣대와 차별이 성행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태국 정부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실질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인권을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고 여겼다. 국가는 인권에 대해 기본적인 책임을 지며 국제사회는 일부 국가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질 권리는 있지만 대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며, 인권은 정치와 경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발전·민주·인권은 내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는 상호 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태국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발전을 인권침해, 민주억압의 이유로 들 수 없다

---

터 4월 2일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에서 대다수 아시아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방콕선언』을 통과시켰다.

고 보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문제는 아시아 혹은 비서방국가의 관점이 아니라 서방 세계와 유엔이 사회·경제적 권리와 발전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전체적인 인권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각종 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빈곤에 허덕이며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인권과 민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레이시아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 집단적 권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지나친 자유는 사회도덕을 부식시키고 사회조직을 파괴하며 사회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다. 유엔은 개발도상국에게 자신만의 정치·사회와 경제제도를 구축할 수 있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렇게 구축된 제도들은 자국의 전통과 가치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말레이시아는 유엔 인권기구가 선진국들에 의해 조종되고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고 보면서, 유엔인권기구를 개선해 국제관계가 민주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한국은 아시아와 서방의 인권 격차를 조율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이며 분리할 수 없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서, 일부 인권으로 다른 인권의 합법성 혹은 비합법성을 부정 혹은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권과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고자 한다면 우선 각 국의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저개발이 국가의 인권 침범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방 세계의 인권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 혹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급진적 민족주의 양산을 부추길 뿐이라고 여겼다.

일본의 태도는 서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인권은 보편적이므로 전통문화, 경제·정치제도가 어떻든 간에 국가는 모든 인권을 보호·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국가의 인권보호 책임은 국제 기본원칙과 일치해야 하며, 타국의 인권침해로 인한 개입을 한 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일본은 발전우선론을 반대하며, 발전은 인권에 봉사해야지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일본은 개발원조와 인권상황을 연계해, 이를 근거로 그에 상응하는 대외정책을 제정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았다. 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의 인권을 평가할 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권리들은 똑같이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때의 순서는 조금 다르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동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일부 국가(주로 중국과 싱가포르)는 발전이 인권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아시아 국가는 보편적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진정한 보편적 가치는 많지 않으며, ICCPR<sup>18)</sup>이 규정한 권리만이 핵심이라 보았다. 이러한 권리는 종족학살, 학대와 노예 등을 금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국가의 인권에 대한 입장은 아시아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시아의 인권보장에는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빈곤이다. 아시아 빈곤인구는 세계 빈곤인구의 2/3인 약 33억 정도로써, 1인당 생산액은 겨우 세계 평균수준의 1/5에 불과하며, 그 소득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sup>19)</sup> 인도네시아는 현재 총 인구가 2억 1천만 명이며 그 중 빈곤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이다.<sup>20)</sup> 태국의 빈곤인구는 약 750만 명 정도로 전체인구의 10%를 차지하며 대부분의 빈곤인구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다.<sup>21)</sup> 중국은 현재 2천 8백만 명의 사람이 극도의 빈곤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도시빈곤 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sup>22)</sup>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음식, 물, 의복, 거주지 및 깨끗한 공기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하지만 극도의 빈곤은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은 바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sup>23)</sup> 인간의 최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인권의 핵심부분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인권의 외연부분(예, 정치적·시민적 권리)이 실현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때문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 빈곤 퇴치는 가장 시급한 문제

18) ICCPR: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총회 1966년 12월 16일 제2200A(XXI)호 결의.

19) 2002년 4월14일 『人民日報』 ; 2002년 7월30일 『中國經濟時報』

20) www.chinaacc.com/new/2003\_10/31021092001.htm, 2005년 5월 21일.

21) 『泰國扶貧助農有招數』, 上海農業網, 2004년 5월 13일

22)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 도시 최저생활보호 대상자는 2,143.3만 명이었다. 2002년 말, 중국 농촌의 빈곤층은 2800만 명이었다. 자료출처: 중국인구왕

23) 인간의 최소욕구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기본적 생리수요. 인간의 생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열량섭취와 영양 및 최소한의 의복과 주거보장; 둘째, 기본 서비스, 깨끗한 물, 환경보건, 의료와 교육; 셋째, 사회수요. 일자리, 교류, 존엄, 사회적 지위.



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시아에 유리한 경제발전은 단기적으로 서방 사회에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서방 국가는 아시아에 대한 인권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경제발전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자가 말한 것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은 서방 국가가 일으킨 인권 전쟁에 대해 어리둥절해 할 뿐이다. 그들에게 인권전쟁은 이런 것이다. 배고픔과 병에 찌든 사람들을 한가득 실은 낡은 배가 위험수역을 향해하고 있다. 배에 탄 승객들은 앞으로 조금씩 죽어나갈 것이다. 선장은 엄격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기도 한다. 한 무리의 부유하고 의식주 걱정 없으며 걸으로 보기에는 우호적인 구경꾼들이 마침 강기슭에 서 있다. 구경꾼들은 사람들이 채찍질 혹은 감금을 당하거나 말할 권리가 빼앗기는 것을 보면 바로 배로 달려와 간섭하며 선장의 억압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보호한다. 승객들은 배고프고 병에 찌들어 있다. 승객들은 독에 닿자마자 생명의 은인에게 달려가 부둥켜안아 보지만 구경꾼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배에 다시 태워 보낸다. 승객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간다.<sup>24)</sup> 이것이 바로 서양 인권의 약점이다. 남아공의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바 있다. “200년 전 서양 사람들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올 때, 우리는 황금을 손에 쥐고 있었다. 200년 후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황금을 쥐고 있다. 아시아인도 유치하게 단순히 종교 신앙에 매달리지만 말고 한 손에 황금을 움켜쥐고 있어야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비록 발전권과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 중의 하나이며 빈곤 퇴치가 아시아 국가 발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발전권과 생존권의 강조는 또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 중국의 예를 들면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30년 간 70년대의 전통적인 권력집중 통치를 개방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사회관리로 전환했다. 사회의 전면적 상업화는 인간의 자연적 욕망을 크게 발산시키면서 인간의 정신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인간은 물질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했고 소외돼 버렸다. 처음에 속박돼 있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억압의 과정으로 바뀌어 버렸다. 과거 국가만이 억압하던 형태

24) Eva Brems, Human Rights: Universality and Diversity, Martinus Nijhoff Publisher, 2001, p.40.

에서 국가와 시장이 이중으로 억압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고, 후자의 억압은 견제할 만한 것이 없어 더욱 심각하며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 때문에 발전과 생존권을 강조함과 동시에 시민의 정치적 권리 및 기타 다른 권리의 발전도 촉진시켜야 한다. 발전을 이유로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억눌러서는 안 되며, 발전과 민주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여 여러 권리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원성·현대성이 인권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보편적 지식과 국부적 지식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인권관은 반드시 전 세계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인권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경험과 현실상황, 견해의 차이로 다양한 인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라는 같은 곳에 살면서 공동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동서양이 앉아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 동아시아 지역 의식의 원류(源流)·발전 및 현대적 의의

외교학원 외교과 천평린(陳奉林)

동아시아 역내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점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사상의 공감대인 ‘동아시아 지역의식’도 점차 화두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더 이상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까지도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원류와 발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독자적인 세계로서 자신만의 독특한 국제관계 질서와 역사적 문화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존 킹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 에드윈 올드파더 라이샤워(Edwin Oldfather Reischauer) 등은 “유구한 역사 과정에서 이 지역 사람들은 조직적이고 기술적이며, 부의 축적에 있어 유럽 혹은 다른 문명지역의 민족보다 우수하고 월등하다……특히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는 독특하고 고도로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 그들에게 위대한 역사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오늘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건설한 바탕이 되었다……이러한 특징의 근원은 바로 이 지역 각 민족의 풍부한 역사적 경험 뒤에 있는 깊은 역사적 전통에 있다”<sup>25)</sup>고 말했다. 중국,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의식의 역사와 현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적이다.

## 1.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원류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80년대 들어 동아시아 지역에서 생겨난 학술용어이며,

25) John King Fairbank (존 킹 페어뱅크), Edwin Oldfather Reischauer (에드윈 올드파더 라이샤워) 등  
著: 『東亞文明: 傳統與文明』, 天津出版社, 1992, pp.2~3.

그의 탄생은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경제가 자각의 단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동아시아 지역의 개인, 민족과 국가의식을 초월한 일종의 공동체의식이자, 전체적으로 비슷한 문화배경 아래 분산되었던 상태에서 하나로 연결하고자 하는 자아의식이며, 발전과 단결을 갈망하는 이 지역 내의 사상·감정·바람을 가리킨다. 의식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기초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들어섰을 때 나타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형성·발전은 이 지역 정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식 문제에 대해 국내학자들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 어떤 학자는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근대 이후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周)나라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한·당(漢唐)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완성되었다……주나라의 방기(邦畿)제도가 당시의 지역의식을 잘 보여준다.<sup>26)</sup>”고 밝혔다. 그 근거는 바로 주나라 때 시행했던 ‘오복(五服)제도’(전복(甸服), 후복(侯服), 수복(綏服) 혹은 빈복(賓服), 요복(要服), 황복(荒服))와 『상서(尙書)·우공(禹貢)』 편 우임금이 치수하여, 세상을 아홉 주로 나눴었다는 기록에서 고대 중국인의 세계관과 지역의식을 볼 수 있다. 선진(先秦)시대의 이러한 생각은 후대 중국인의 지역사상과 방향관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다른 학자는 “동아시아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일찍이 중국의 한나라 때 화이사상(華夷思想)·봉진체제와 유교 국가를 황제개념과 결합시키면서 국제정치 관계로서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는 기본 여건이 이미 마련되었다<sup>27)</sup>”고 생각했다.

필자는 동아시아 의식의 원류가 주나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러한 의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중국과 사방(四方)의 기본관념을 만들어 냈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역의식이 싹트는 단계일 뿐 완전한 의미의 지역의식은 아니었다. 진·한(秦漢)시대에 중국의 대외영향력이 확대되고 대외 접촉과 교류가 많아지며 지역의식이 형성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진·한제국의 수립은 중국의 정치적 통일과 함께 동아시아에 지역대국이 탄생한 것을 말하며, 중국과 세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정치적 영향력과 영토확장에서 진나라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제국을 만들었고, 후대 중국영토의 판도를 다져

26) 宋南有, 湯重南主編: 『東亞區域意識與和平發展』, 四川大學出版社, 2001년, p.1.

27) 宋南有, 湯重南主編: 『東亞區域意識與和平發展』, 四川大學出版社, 2001년, p.174.

놓았다. 한나라 시대의 발전은 여러 분야에서 진나라를 뛰어 넘었다. 양한(兩漢) 시대에 중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일본열도 및 베트남과 교류하였으며, 심지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와 지중해지역과도 관계를 다지면서 구주(九州)의 지역범위를 뛰어넘어 대일통(大一統)의 이상을 일궈냈고, 또 사회발전이 최고조에 달하며 중국은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번영과 발전은 고립되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각 국의 공동 참여로 만들어진 것이며, 모든 국가가 자신의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 냈다. 동아시아 국가는 대부분을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교류하면서 지내는 동안 대체적으로 비슷한 지역의식을 갖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의식 때문에 동아시아 각 국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지속적으로 정치·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모든 공동체의 구축에는 경제·정치·문화적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하며 발전한다.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호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본학자 호리 토시카즈(堀敏一)는 “동아시아 지역에 가장 먼저 고도 문명이 나타난 곳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탄생한 문명이 중국 주변지역 및 주변 민족을 융성하게 하였으며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세계를 탄생시켰다<sup>28)</sup>”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지역은 중국문화와 정치력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어서 화이질서(華夷秩序)라는 오래된 국제관계가 존재했다. 지금 보면 이 국제관계는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평화·우호·선린적이었다. 이러한 질서 안에서 중심과 주변의 구조는 매우 명확했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환경에 조선과 일본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질서의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

조선과 일본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세계에 참여하면서 동아시아가 국제사회로 더욱 빠르게 발전하였다. 기원전 1세기 웨인은 중국 한나라와 관계를 맺었다. 웨인의 30여개 왕국이 한나라와 통하였고, 이러한 관계는 ‘세시(歲時)에 와서 헌견(獻見)’하는 방식으로 확립되었다. 한 세기가 넘게 발전하면서 동한(東漢) 광무제(光武帝)(서기 57년)때에 왜노국(倭奴國)은 동한의 수도인 뤼양(洛陽)에 사자를 파견하였고 광무제는 ‘인수(印綬:금인(金印)과 끈)’를 하사하여 우호를 표시하였

28)堀敏一(호리 토시카즈): 『中國與古代東亞世界』, 岩波書店, 1993년, p.2.

다. 한(漢)제국이 무너졌어도 야마타이국(邪馬臺國)은 여전히 중국과 국교를 유지했으며 238~247년 10년 동안 야마타이국은 위나라에 다섯 차례나 사절을 보냈고 위나라도 야마타이국에 두 번의 사절을 보냈다. 야마타이국이 위나라에 사절을 보내 위나라와 국교를 강화한 목적은 “중국왕조의 책봉체제에 새로 합류함으로써 중국의 승인과 보호를 받고 이를 빌어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부속국에 대한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위나라에 발 빠르게 사자를 보내 조공을 바침으로서 지리적 요인으로 중국왕조와의 관계가 다른 동이(東夷)민족보다 긴밀하지 않은 외교적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이 때문에 야마타이국은 위나라 황제의 호감을 얻고 동이민족들 사이에서 지위를 높일 수 있었다.”<sup>29)</sup> 정치·경제적으로 중국보다 크게 뒤떨어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류는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계로서 서로 다른 국가들이 이 세계에 들어와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를 이루었다.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합류해야만 일본은 진정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었고, “일본은 지리적·정치적으로 동아시아 세계의 한 부분을 구성할 수 있었다.”<sup>30)</sup> 조선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합류한 것은 일본보다도 빠르며,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조선은 중국과 전통적인 정치·경제와 외교적 관계 외에는 다른 나라와의 왕래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은사(隱土)의 왕국’이었다. “한반도 각 국은 모두 중화 사상을 받아들였다. 또한 이 국가들은 중국을 배우고 중국 중심의 화이국제질서를 받아들이며 여기에 적극적으로 합류했다.”<sup>31)</sup> 위의 평들은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국가와 일본의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태동부터 형성까지 보면, 우선 이 지역에 평화적인 국제질서 즉 ‘화이질서’를 구축해 모든 국가를 이 질서와 연결고리 안에 아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화적 교류는 각 국의 우호적 발전을 가져왔고 새로운 문명지역과 문명 성장점을 형성하였다. 평화적이고 호혜상생의 전통적 국제관계 질서는 동아시아 역사발전의 주 기류가 되었다. 이러한 질서에 따라 중국, 조선, 일본은

29) 沈仁安: 『日本起源考』, 昆侖出版社, 2004년, p.128.

30) 沈仁安: 『日本起源考』, 昆侖出版社, 2004년, p.39.

31) 堀敏一(호리 토시카즈): 『中國与古代東亞世界』, 岩波書店, 1993년, p.3.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이익 교착점을 찾아 동아시아 세계에서 각자의 위치와 순서를 정하였다. 중국학자들은 고대 중국이 구축한 조공체제 중심의 국제질서는 “중주국이 번속국(藩屬國)을 보호할 책임을 다 함과 동시에 번속국의 내정·외교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중국의 내정불간섭 정책은 조선과 일본이 화이질서 아래 양국간 친교관계를 맺게 하는 전제조건이다.”<sup>32)</sup> 라고 말했다. 일본학자 하마시마 타게시(濱下武志)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그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조공관계, 즉 조공무역 관계는 아시아에만 있는 유일한 역사적 체계이므로, 이러한 각도에서 출발해 깊이 생각해야만 아시아 역사의 내재된 연결고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sup>33)</sup>고 말했다. 이러한 질서에서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상호간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후자는 전자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貢期)내 중국에 사절(貢使)을 파견하고 중국왕조는 그들을 인정하고 책봉했다. 이런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본질적으로 이런 국제관계는 고대 군신관계의 확대이며 비록 불평등하기는 하지만 우호적이고 평화적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형성은 공동의 문화로도 잘 나타난다.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는 비교적 완전한 지역문화가 있었다. 곧 중국 유교문화 중심의 문화체계였다. 이 문화체계에서 문자는 문화의 중요한 매개체였다. 진한(秦漢)시대에 중국문자는 이미 한반도, 일본에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중국문화도 이와 함께 전파되었다. “한자, 한(漢)문화가 한반도에 전파된 후 한민족은 이를 빠르게 수용했고, 한자를 통해 한문화를 받아들여 자국 문화와 융합해 민족의 전통문화를 창조해냈다. 또한 그것의 풍부한 문화적 성과는 동아시아 문화체계의 내용을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켰다.”<sup>34)</sup> 한자는 조선·일본의 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서 통용되는 국제문자가 되어 문화의 전파와 교류를 더욱 빠르게 하였다. 문명의 교류는 문명의 성과를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인류가 공유할 수 있게 하며 인류문명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공동의 문자가 각 국에 혜택을 가져온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으며 각 국은 수준 높은 철학·문학·사학·종교·예술 및 과

32) 陳文壽：『近世初期日本與華夷秩序研究』，香港社會科學出版社，2002년，p.28.

33) 濱下武志(하마시마 타게시)：『近代中國與國際契機—朝貢貿易體系與近代亞洲經濟圈』，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9년，p.30.

34) 楊紹權，何彤梅：『中國—朝鮮·韓國關係史』，天津人民出版社，2001년，p.74.

학기술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 공동 의식은 공동의 문화 배경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무형의 문화이념과 가치의식은 동아시아 각 국을 하나로 응집시켰고 일정부분 세계를 바꿔 놓았다. 지역의식의 출현은 역사의 재발견이다. 즉 인간을 상호 독립적이고 폐쇄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그 대신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연결로 대체시켰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저항, 투쟁 및 전쟁 등으로 큰 대가를 치렀지만 사실 인류의 교류와 협력적 사상은 이미 형성되었다. 각 국가와 민족이 고립되어 생존하던 시대는 이미 새롭게 연결되는 시대로 대체된 것이다.

진나라 때부터 중국은 통일된 국가였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고산준령과 넓은 사막·바다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적 조건과 전통문화 등의 많은 영향으로 인접국가와 교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내륙의 농업문명이 갖는 고도의 안정성과 응집성으로 밖으로 발전하려는 내부 동력이 부족했다.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었고, 외부와 단절된 지리환경은 동아시아 지역을 독립된 지역단위로 만들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랫동안 농경경제가 중심이 되며 문화가 일찍 성숙한 특징을 보였다. 조선의 상황은 중국과 전체적으로 비슷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나라에 속해 자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외교적인 충격과 자극이 필요했다. 국내시장이 협소한 특성 때문에 일본은 주의를 국외로 돌려 동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공동체 의식의 태동·성장에서 오늘날의 지역 단일화를 모색하는 발전과정은 곧 지리적 환경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2.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발전

수·당(隋唐)제국의 수립은 동아시아를 분열과 전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 시기는 역사 발전에서 결정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식이 전례 없이 발전하던 시기였다.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복잡한 역사발전 과정의 결과물이며 관련된 내용도 아주 많다. 동아시아 지역이 독자적인 역사세계인 만큼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 즉 동아시아 개념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중국학자는 동아시아 세계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를 유학, 과학, 전장(典章)제도, 기술, 종교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어떤 사람은 이를 한자, 유학, 율령, 불교 등 네 가지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개괄하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최소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반영했다 하겠다. 역사발전의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개념의 발전 시기를 수·당 시기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정치·경제·문화·외교적인 성과에 있어서나 후대 역사에 미친 영향력에 있어서나 수·당 시기는 지역의식이 크게 발전한 시기이며, 동아시아 각국이 서로 다른 정도로 지역의식을 실천해 나간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중국의 문물인 전장제도를 배우고 사회 개혁적 의미를 지닌 다이카 개신(大化改新)을 진행하였고, 수·당의 중앙집권 국가 형식에 따라 정치·경제구조를 개혁하며 중국을 배우는 열풍을 일으켜 자신을 동아시아 세계체제에 융화시켰다. 한반도의 고려왕조도 전장(典章)제도는 완전히 중국의 것을 배웠고, “문물예악은 당의 제도를 따랐다(文物禮樂, 悉遵唐制).”<sup>35)</sup>

동아시아 각국을 긴밀히 연결시킨 주요 요소는 경제가 아니라 문화이다. 문화발전은 반드시 사회발전과 같지는 않으며 때로는 경제발전보다 우선시되기도 한다. 문화는 동아시아라는 큰 나무의 줄기이며, 철학·예술·법률·경제 및 과학은 줄기 위에 달린 열매이다. 동아시아의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세계구조에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화는 모든 국가·민족과 지역을 하나로 연결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 공동의 정신적 문화자원을 형성했다. 중국의 한자문화는 강한 매력으로 주변 국가를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끌어들이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뛰어난 한자문화는 심리적·사상적으로 각국을 연결했다. 프랑스학자 레옹 반데르메르스(LeonVandermeersch)는 『새로운 한(漢)문화권』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한문화권 국가 간 다른 문화적 특징은 모두 공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유사성은 인도·유럽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들 간의 유사성보다 더 강하다. 이런 공동의 정신기반은 바로 한(漢)문화권 국가들이 사용한 한자이다.” 만약 공동의 공용한자가 없었다면, 누

35) 黄枝連：『東亞的禮儀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論』，中國人民大學出版社，1994年，p.65.

구나 볼 수 있는 한자 시문·사학·문학과 철학을 쓸 수 없었을 것이며, 한자문화권을 만들지 못했고, 공동의 문화의식과 문화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레옹 반데르메르스는 “발음이 다른 한문은 19세기 말까지 이 지역 국가들이 정치·행정 공문서에 사용하던 도구였으며, 가장 격조 높은 문자 표현 도구였다. 한자는 1000여년의 기간 동안 가장 선두에 서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한문화를 전파하는 데 이상적인 통로를 제공했다.”<sup>36)</sup>고 설명했다.

일찍이 상주(商周)시기에 형성된 중국과 사방(四方)의 방위관념은 진한(秦漢)을 거쳐 수당(隋唐)시기에 더욱더 발전하며 명확한 지역의식을 형성했다. 문명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의 역할도 달랐으며 주변 국가는 평등하게 동아시아 세계에 참여할 수 없었고 지위가 낮은 신하의 예로 이 세계 질서에 참여했다. 진·한 이후, 특히 ‘백가(百家)를 배척하고 유가(儒家)만을 중시’한 한나라 이후 수-당-원-명-청 시기까지 중국의 천조(天朝)관념은 최고조에 달했다. 명·청(明清) 두 시대에는 조선, 류큐(琉球), 안남(베트남), 라오스, 시암(태국), 소록(필리핀), 미얀마 심지어 서양의 포르투갈, 로마교황국, 네델란드 등 모두를 조공국으로 대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당시기의 지역의식은 중국 중심이었다. ‘화이질서’는 근대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시기의 상대방을 위협하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일방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불평등한 국제질서와 달랐다. “화이질서의 국제관계 원칙은 번속국이 최대한 민족자결성을 발휘하여 자유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본보기가 될 만하다.”<sup>37)</sup>

동아시아 지역의식 발전은 주로 각 국 간 상호연결이 더욱 심화되고 교류범위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수·당 시기 일본은 중국에 대규모 유학생과 승려를 보내 중국문화를 배우게 하였고, 중국문화는 거센 파고와 같이 일본에 유입되며 일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간 유학생과 승려들이 진언하기를 “당나라에는 법식이 완비돼 있어 귀한 나라이니 자주 가 봐야 한다.”<sup>38)</sup>고 했다. 몇 마디 말로도 일본의 선진문물을 배우며 뒤쳐지지 않으려는 진취정신이 엿보인다. 일본과 한반도에서 창안(長安)과 튀양(洛陽)으로 오는 유학생

36) LeonVandermeersch(레옹 반데르메르스): 『新漢文化圈』, 江西人民出版社, 1993년, p.87, pp.98~99.

37) 陳文壽: 『近世初期日本與華夷秩序研究』,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2년, p.448.

38) 維華主編: 『中國古代對外關係史』, 高等教育出版社, 1993년, p.109.

과 상인이 줄을 이었고 특히 일본이 당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은 500~600여명에 달해 그 규모가 대단했다. “비록 배가 침몰되고 해난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일본은 위험을 무릅쓰고 귀한 지식과 경험들을 갈구하며 배운 것들을 모두 일본으로 가지고 갔다.”<sup>39)</sup>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600~700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던 ‘왜(倭)’라는 명칭이 이때부터 ‘일본’이란 명칭으로 바뀐 것이다. 한반도 삼국시대에 중국 당나라로 온 유학생 수도 상당했다. 당나라에 가장 많은 유학생과 승려, 왕자를 파견한 나라는 신라이며, 그 수는 100~120명에 달했고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10년 이상 머물렀다.<sup>40)</sup> 교통 분야는 육로와 해로로 일본열도, 한반도와 중국을 하나로 연결했다. 사실상 한반도는 이미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요한 교량이 되었다. 중국 허베이(河北), 산둥(山東) 및 남동 해안에서 한반도, 일본을 잇는 항로도 일찌감치 열려 있었다. 당나라 시대에 양조우(揚州)는 한반도와 일본에게 중요한 무역항이 되었다. 통일된 당제국의 수립도 한반도의 정치통일을 촉진시켰다. 한반도에서 신라는 원교근공(遠交近攻)정책을 취하며 당나라의 지원을 받아 통일을 완성했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 사회의 전체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국가와 일본의 자주성은 강화되었고 자발적으로 외래문화를 흡수해 자신들을 발전시키며 이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당나라 때 주변의 한반도 국가와 일본은 원시사회에서 벗어나 고대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7세기 때에 당나라 문화를 익혀 생산력과 문화를 급속도로 향상시켰다.”<sup>41)</sup> 중국과 외국과의 교류 및 동아시아 지역과 역외의 교류는 당나라의 태평성세를 만들었고 특히 한반도와 일본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안에서 동아시아의 전체발전을 가져왔다. “주변 국가의 조공과 중국황제의 하사라는 이러한 형식은 동아시아 근대 이전 국제질서의 기본 형태가 되었다.”<sup>42)</sup>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좁은 국가별 의식을 탈피해 국제무대로 나와 더욱 심화 발전하였다. 이것은 지역의식 발전의 중요한 표지이다. 이의 형성은 필연적이며 동아시아 정치사회·경제와 문화발전의 결과이다. 왜 이때 동아시아 지역에 공동체의식이 발전한 것일까? 이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발전 상황들을

39) Rhoads Murphey(로즈머피): 『亞洲史』, 海南出版社, 三环出版社, 2004년, p.225.

40) 堀敏一(호리 도시카즈): 『中國與古代東亞世界』, 1993년, p.262.

41) 藤間生大(토오마세이다): 『近代東亞世界の形成』, 春秋社刊, 1977년, p.25.

42) 田中健夫(다나카 다케오): 『東亞通交圈與國際認識』, 吉川宏文館, 1997년, p.21.

심도있게 연구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이의 배경에는 일관되고 전체적인 그 무언가가 큰 역할을 했다. 조공무역이 동아시아 국가관계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조공무역 문제에 대해 일본학자 호리 토시카즈는 “정치적·문화적 요구 외에 조공을 통해 중국과 무역을 하여 중국 물자를 얻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고 특히 유목민족의 이러한 요구는 더욱 컸으며 농업국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공을 통해 중국 왕조로부터 답례로 물품을 하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공 자체는 교역의 한 형태였다.”<sup>43)</sup>고 말했다. 수·당 시기에 형성된 지역 무역 네트워크는 각 국을 하나로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인도양 및 이슬람세계의 무역을 연결했다. 지역 내 무역의 발전은 ‘경제공동체’라 불릴 만했다. 당나라 때는 동아시아 각 국의 연결이 전례 없이 긴밀했던 시기이며, 상품 교환과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했고 상품생산·교환이 발전하며 각 국가 간의 교류도 세계무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건은 지역의식의 발전에 충분한 물질적 여건을 제공했다. 역사가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지역의식이 발전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제정세가 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선 중국의 주변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주변국가가 자발적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선순환의 좋은 관계가 생겨났다. 모든 것이 동아시아 지역의식이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안타깝게도 당제국이 붕괴된 후 동아시아 지역은 혼란과 불안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주변민족과 국가가 반목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바로 당제국이 붕괴된 후 길고긴 동면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비록 이 후에 송(宋), 원(元), 명(明), 청(淸) 등의 여러 왕조가 출현했지만 동아시아 내부의 복잡한 상황과 문제들로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한 일본학자는 “중국왕조가 강할 때는 주변 여러 국가들이 국제적 지위가 낮았고, 중국의 힘이 약한 시기에는 주변 국가들의 국제지위가 높았다”<sup>44)</sup>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현실을 정확하게 본 말이 아닐 수 없다.

수·당 시기에 발전한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전체 동아시아 국가관계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비록 국가 간에 갈등과 마찰 및 전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43) 堀敏一(호리 토시카즈): 『律令制與東亞世界』, 1993년, p.166.

44) 坂元義種(사카모토요시타네): 『古代東亞與日本與朝鮮』, 吉川宏文館, 1978년, p.47.

시기를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교류하며 지냈다.

### 3.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현대적 의의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동아시아 역사가 일정한 단계까지 발전하며 생긴 결과물이다. 동아시아 문명은 과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중의 하나였다. 동아시아 문명의 방대함과 다양함, 유구함과 영향력은 16세기~17세기 이전에는 줄곧 세계 문명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 동아시아가 서양 자본주의 세력의 거센 파고에 세계의 주변지역으로 밀려나며 동아시아 지역의식이 와해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각 국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선 70년대 일본경제가 발전하였고 그 뒤를 이어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 신흥 산업국가와 지역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들어 중국경제가 역사적인 도약을 이루며 서양의 현대화 발전과는 차별화 된 동아시아 모델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또 한번 동아시아 지역 의식을 일깨우며 인식적인 측면이나 실행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자성(自性)’을 되찾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키워 나갔다. 이 부흥은 단순한 역사의 순환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가 새로운 바탕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동아시아에 세계 역사적으로 유례없었던 산업화, 현대화의 큰 물결이 일어났다. 80년대 들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 속도가 서방세계의 초기 산업화 시기의 성장속도를 크게 넘어섰다. 동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과 가장 활력 있는 지역이 되었다. 또한 세계의 중심을 대서양에서 환태평양지역으로 옮겨놓으며 ‘태평양시대’의 서막을 열었다.”<sup>45)</sup> 수백년의 진화발전을 거치면서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새롭게 고개를 들며 동아시아 각 국의 협력과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험난한 임무에 마주하게 되었다. 지금이 바로 다시 한번 동아시아 사회의 힘을 발휘할 때이다.

45) 梁志明主編：『東亞的歷史巨變與重新崛起』，香港社會科學出版社，2004年，p.41.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지역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역내 각 국의 사회규범과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미국 양진영의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시아를 뒤덮었다. 50~60년대 아시아 정세는 냉전이 격화되면서 복잡하게 변했고 상황은 유럽의 상황보다 더욱 복잡해졌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동아시아 각 국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왔으며, 각 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정국은 소요에 휩싸였다. 60년대 후반에서야 사회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며 지역협력에 관한 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록 정부 간 제도화된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하지만 각 국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희망을 볼 수 있다. 동아시아 각 국은 이미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전후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과학 연구 활동이 복잡해지고 생산력이 거대해지면서 이미 단일 국가 혼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쫓던 식민주의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도 지나갔다. 지금은 각 국이 하나로 힘을 합치고 상호의존하며 호혜상생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촉진으로 동아시아 지역의식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동아시아가 세계무대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냉전의 대결시기가 세계를 양 진영으로 나누어 군사력과 이념의 대립에 의지하여 경제가 정치를 따르던 시기였다면, 냉전이 종식된 후의 시대는 경제활동이 이미 외교활동의 중심이 되어 경제이익이 부각 되는 시기이다. 지금은 불평등한 교역방식은 통하지 않으며, 냉전적 사고도 이미 진부한 것이 되었다. 이것과 비교해 보면 호혜협력과 경쟁하며 공존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변화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은 자본의 급속한 증가뿐만이 아니었다. 정의와 양심을 일깨움으로써 사람들이 고효율을 추구함과 동시에 공정성을 잃지 않게 하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행위가 다양한 주체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게 되었다. 인류는 이로써 내가 흥하고 남을 망하게 하는 이익쟁탈방식에서 벗어나 점점 상호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sup>46)</sup>

동아시아 지역도 근대 유럽과 같이 자신의 ‘사상적 밑거름’과 심성(心性)이 있

46) 王文元：「有關國際化的若干理論問題」，『北京社會科學』，1994년，4호.

다. “지역의식의 지속적인 증가는 동아시아 협력의 깊이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된다. 민족 국가의식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지역의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다.”<sup>47)</sup> 동아시아 지역의식의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이성적으로 현실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고 공동의 정신적 지주를 만들게 하며, 식민주의·제국주의 시대와 냉전시대의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대결을 버리고 협력하며 호혜상생의 길을 걸어 다함께 부유해지게 하는 데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협력과 자원통합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발전하는 사회에서 동아시아 의식 중의 공존·융화와 협력정신은 세계 다문화 공존의 필요에 부응하고 세계화시대의 발전방향에도 부합한다. 리션즈(李慎之)는 『세계화와 중국문화』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이야기 했다. “수백만 년 전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한 이래, 대체로 분리되는 추세였다. 삶을 위해 사람들은 갈수록 더 벌어졌고, 멀어져 갔다. 그러나 지구는 둥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러한 추세가 뒤집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sup>48)</sup> “인류가 다시 모였다”, 이것은 곧 인류의 집단주의 시대(혹은 지역주의 시대)를 말하며, 사실상 이러한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초기 유럽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과 생산규모가 발전한 오늘날에는 인류가 국가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의 차이를 넘어서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더 큰 규모의 비교 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시아 의식 속에 들어있는 공존·융화와 협력사상은 지역화 진행과정에서 다른 민족, 국가, 문명간의 이익관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47) 李文：『東亞合作的文化成因』，世界知識出版社，2005년，p.197.

48) 李慎之，何家棟：『中國的道路』，南方人民出版社，2000년，p.5.

## 동북아 단일화 과정의 부정적 감정요인

베이징 사범대학 류샤오린(劉少林)

동북아는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몽골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유럽단일화 과정이 확대·진행되고 있고, 북미자유무역지구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아세안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에서 정치 단일화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동북아 국가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지만 중요한 정치·경제적 통합력이 부족하다. 동북아 국가 간에는 현실적인 여건의 제약, 예를 들면 국가 간 경제사회 발전의 차이, 영토분쟁, 전쟁이 남긴 역사문제 및 정치 이데올로기와 안보관의 차이 등 여러 이유로 미래 세계정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안보가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타이완 해협 충돌과 한반도 위기 및 일본의 북방4도 문제 등은 마치 다모클레스의 검과 같이 동북아 지역 상공에 매달려 심각한 안보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동북아 지역 내 각 국의 부정적 사회 감정요소가 동북아 단일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 1. 동북아 단일화 과정의 현실요소와 발전과정

우리가 동북아 단일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경제단일화를 가리키지만 사실상 단일화의 범위는 매우 넓다. 경제는 단지 그 중의 일부분일 뿐이며 단일화의 초기단계일 뿐이다. 엠마뉴엘 아들러(Emmanuel Adler)와 마이클 바넷(Michael Barnett)의 안보 공동체에 관한 세 단계 표에 따르면<sup>49)</sup>, 동아시아는 여

49) Emanuel Adler and Michael Barnett, Security Commun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p.135.



전히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역내 과학기술·경제·문화와 사람 간 서로 상호 작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상호 이익을 증가시키고 상호 신뢰를 쌓고 난 후에 비로소 상승단계와 성숙단계로 들어설 수 있다. 2004년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462,396명(그 중 홍콩·마카오지역에서 온 99,179명은 장기 거주)이며,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666억 달러에 달했다.<sup>50)</sup> 아래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동북아 국가 간 교류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내 국가 간 상호의존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표1 2004년 중국의 주요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입 상황

국가와 지역	수출액(억 달러)	작년대비 증가(%)	수입액(억 달러)	작년대비 증가(%)
중국 홍콩	1,009	32.3	118	6.1
일 본	735	23.7	944	27.3
한 국	278	38.4	622	44.3
아 세 안	429	38.7	630	33.1
유럽연합	1,072	36.9	701	28.8
러 시 아	91	51.0	121	24.7
미 국	1,249	35.1	447	31.9

자료출처: 국가통계국 웹사이트

도이치(KarlW Deutsch)의 커뮤니케이션 이론(communications) 혹은 거래주의라고도 불리는 이론에서는 두 국가 혹은 둘 이상의 국가 간 교류가 잦을수록 더욱 가까워지며 서로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고 설명한다. 교류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은 상호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며, 신뢰와 상대방에 대한 인정은 다시 교류와 상호 간 연결을 더욱 촉진시킨다.<sup>51)</sup> 이런 선순환 과정에서 교류 밀도 혹은 상호 의존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단일화가 출현할 가능성도 더욱 커진다. 동북아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2000년 이상의 교류 및 문화와 종교 분야 등에서 많은 연결이 있었던 지역이다(거의 모두 유교문화권의 영향 범위에 있었음). 게다가 현재 경제 분야의 긴밀한 연결 관계는 역내 인구로 보나 전체 GDP 혹은 국제경제에서의 영향력과 전 세계 무역 교역량으로 보나 모두 다른 2대 지역기구와 견줄 만하다. 만약 역내 주요국가인 한국·중국·일본이 핵심국가로서 연합한다면, 동북아 역내의 경제 엔진이 되어 다른 후진국의 발전

50)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china/index.html>.

51) 肖歡容: 『地區主義: 理論的歷史演變』, 北京廣播學院出版社, 2003년, pp.53~58.

을 견인해 나가며 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북아 지역의 단일화 조건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단일화 정도는 왜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며 동력이 부족하고, 향후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과 일본은 2002년 6월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한·일 자유무역협정 (ROK-Japan FTA) 체결 가능성을 연구하고 2003년 10월 관련보고서를 마무리 지었다. 한·일 두 정상은 2003년 10월 20일 방콕 정상회의에서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사회보장과 세관 등 업무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일 간에는 각각의 관련 분야에서 일부 기능적인 협상과 협력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아직도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한·중·일 3국은 두만강 개발지구 구축에 대해 여러 해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 '아세안 + 3(한·중·일)'의 기제 내에서 제한적인 협력만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한·중·일이 자유무역지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기만 한데, 어떠한 요소들이 단일화 진행을 가로막는 것일까? 만약 객관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면 주관적 요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동북아 지역사회의 각 행위체 내부 대중의 사회감정 및 정치 엘리트들 간의 감정요인이 단일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사회 감정요인과 단일화라는 이 두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 2. 감정변수와 동북아 단일화

특정지역 내 각 사회 간의 경제·정치·과학기술·문화·사람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감정변수는 큰 역할을 한다. 단일화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회 감정변수는 사회 심리변수에 종속되어 있다. 사회 심리변수는 군중심리와 민족심리를 포괄하며 개인 특히 엘리트층의 심리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 감정요소와 단일화는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단일화는 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

람들은 하나의 개체로서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적 심리경험과 느낌을 가진다. 이런 개인의 감정을 모아서 하나의 전체를 만들 때 사회 전체의 단일화에 대한 감정이 형성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좋고 싫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협’, ‘자아’와 ‘타자’ 간의 정체성, 신뢰와 존중, 평화적 미래에 대한 기대 및 이와 함께 생길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영예감과 책임감 등이다. 감정의 반응은 주로 인간의 인지적 요소와 연결되며, 특정 종교, 문화, 민족 신앙, 가치 및 사회 환경적 영향 하에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감정이 일단 형성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이성적인 측면들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변수로서 측정이 어려우며, 종합적인 관찰을 통해 그 중의 전체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 1) 동북아 단일화의 역사와 실제적 경험 및 감정인지

동질의 문명과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산다면 신뢰를 촉진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깊게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역사경험이 지속적으로 현실적인 자극을 받아 각각의 사회가 자기 역사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기억해 내면 결과적으로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심해진다. 오래전 서로를 ‘적’으로 봐왔던 것을 후대에 다시 재현해 낼 때 결과는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팽창과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야’ 역사적인 해묵은 앙금을 풀 수 있다는 감정이 생겨난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감정은 ‘자아’와 ‘타자’ 간의 충돌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하는 감정을 생길 수 없게 한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의 동북아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북아 사회는 이러한 감정이 팽배한데, 특히 북한-일본, 중국-일본, 한국-일본 간에 존재하며 심지어 일본-러시아 간에도 북방 4도 문제로 어느 정도는 이러한 ‘인상’을 준다.

일본은 동북아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잔혹한 식민통치의 역사를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이 종식되면서도 청산하지 못했다. 현재의 동북아 국제관계 구조는 여전히 일종의 포스트냉전시대에 있으며 일본은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동북아 대륙국가에 대한 포위와 억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거대한 전략과 지역구

도는 한동안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동북아 국가에 뼈아픈 고통을 안겨 주었다. 현실에서도 전쟁이 남긴 문제와 일본 국내의 역사와 전쟁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과거에 상대를 위협하고 ‘적’으로 보았던 것이 현실의 자극과 암시로 각 나라 국민들 사이에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알렉산더 웬트는 『국제정치학의 사회적 이론』에서 ‘자아’와 ‘타자’의 이미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에 내재된 것이며, 오랜 사회적 상호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관계는 ‘친구’, ‘적’ 혹은 ‘경쟁자’로 나타난다고 보았다.<sup>52)</sup> 만약 현실에서 이 타자의 행위가 계속 자아가 상상하는 타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일단 확립된 타자의 이미지는 변경되기 어렵다. ‘타자’는 친구 혹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또한 ‘적’이 아닌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제3의 가능성이 바로 ‘적’이 된다. 이러한 형상이 일단 구축되면, 자아와 타자의 신분이 확립되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도 확정된다.

최근 한국, 중국, 북한과 일본 간의 마찰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 그 중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중-일 양국이 1972년에 체결한 공동성명과 1978년에 체결한 중일평화우호조약은 상대를 ‘적’으로 인식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교 때부터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에서 오류가 있었다. 중국은 일본의 대외침략에 대한 전쟁 책임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군국주의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바로 일본 대다수 보통 국민들의 열광적인 국가주의적 감정이 대외침략 확장을 지지했으며 이는 전후에도 오랫동안 깨끗이 청산되지 못하였다. 중국은 일본에 대한 전쟁 피해 배상청구를 철회하고 제한적인 구두와 서면상의 사과를 받아 들였다. 일본 측도 매우 감격하며 경제원조로 중국에 대해 일종의 배상을 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압력 하에 60년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였고 전쟁 배상청구도 포기했다. 중-일 수교 후 한동안 양국 국민 간 서로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았다. 이것은 일본 외무성과 일본 언론이 80년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0년대 일본 국민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90년대 특히 21세기 들어 이러한 상황은 크게 변했다. 중-일 양국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갖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

52) Alexander Wendt(알렉산더 웬트): 『國際政治的社會理論(국제정치학의 사회적 이론)』, 山海人民出版社, 2000년, p.172.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sup>53)</sup> 이 일련의 조사는 모두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호감과 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비록 구두와 서면으로 어느 정도 전쟁과 역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표시했지만 현실에서 일본의 실제 행동(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태도나 위안부, 강제 노동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배상문제)은 모두 과거 일본 침략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일본이 마음속에서부터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했다. 비록 문화적 차이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 국가들은 이것이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여겼다. 인간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현재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그 중 역사적 경험은 가장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북한·중국 국민들은 일본이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일본 국내 우파세력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주의와 ‘대국 지향 정치’가 과거에 걸었던 길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일본은 그들의 생존과 안보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국가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국내의 민족주의 정서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90년대 점차 지역 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동북아 2강’의 구도는 메이지유신 이후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많은 일본 국민들은 중국이 역사문제로 일본을 억제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드러내며 심지어 ‘핵으로 핵을 억제’해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가입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취한 태도는 일본 국민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더욱 깊게 하였다. 일본 정치 엘리트층에도 이러한 감정이 형성되어 중국이 역사문제로 ‘피해자’ 의식으로 일본을 억제하여 정치대국이 되려 한다고 여기게 됐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대외 행위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5년 4월 미·일은 타이완 지역을 그들의 안보 범위에 포함시킨다며 정식 문서에 기입하면서 중-일 간 감

53) 2003년 3월22일 『中國青年報』, 『日本學刊』 2002년, vol.6.

정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다. 독도(일본 ‘다케시마’) 주권문제는 한-일 양국의 해상순찰대의 심각한 대치국면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신과 비우호적인 사회 환경에서는 단일화에 필요한 공동체 정체성과 신뢰가 형성되기 어려우며, 평화적 미래에 대한 기대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향후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도 커다란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다.

## 2) 동북아 단일화 중의 정체성·신뢰와 상호존중 등의 감정요소

사회심리학자 매슬로우 (Maslow Abraham)의 욕구단계설을 빌려 설명하자면 국가는 ‘의도를 가진 행위체’로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구단계가 있으며 대국과 소국의 욕구는 분명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국가의 욕구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단계는 국가의 생존과 안전, 2단계는 파트너와 소속, 그리고 타국의 존중과 신뢰를 얻는 것, 3단계는 국가의 자기 발전과 이를 실현하는 것이다. 단일화는 국가의 3단계 욕구에 속하며 이것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가와 국가 간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도의 신뢰가 있어야 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이념, 문화와 정체성이 대외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떠한 단일화 과정도 중요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 단일화 과정에서 유럽 각 국은 문화와 종교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 프랑스-독일이 전쟁에 대한 반성을 통해 역사적 화해를 이루어내며, 몇 백 년 간 누적된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자아’와 ‘타자’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 후 단일화 과정에서 프랑스-독일의 신뢰감은 더욱 커지며 단일화 과정의 엔진 혹은 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조건이 부족하다. 동북아는 2000여 년 전부터 교류가 있었고 유교문화권의 영향 범위에 있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문화가 여러 갈래로 나뉘었다. 특히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추진했던 국가주의와 ‘탈아입구(脫亞入歐)’전략으로 자신의 신분을 ‘아시아의 유럽국가’로 정하고 ‘서구의 한 구성원’이 되어 마치 서방국가처럼 주변국가에 대한 일련의 식민전쟁을 벌이며 제2차 세계대전을 야기 시켰다. 전후 냉전구도에서 비록 한국과 한-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1978년 중국과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

했지만 중-일, 한-일 간에 진정한 역사적 화해는 없었다. 평화조약에 ‘화해’라는 문구는 사용했지만 그 후의 국가관계에서 중-일, 한-일 간에는 서로를 ‘적’으로 보는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영토와 역사문제에서 구두로 약속한 전쟁과 역사에 대한 반성에 위배되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각 민족 간 감정의 작용으로 중-일, 한-일은 서로를 ‘위협’으로 보며 이러한 ‘이미지’ 혹은 이로 인해 생성된 안보딜레마는 나선형으로 상승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친구’ 혹은 ‘동반자’로 보는 구조가 생길 수 없게 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동북아에는 국가들을 통합시킬 만한 엔진 혹은 핵심 동력을 형성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동북아 각 국은 국내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며, 정치제도의 동질성(domestic political homogeneity)이 결여돼 있어<sup>54)</sup>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이 선택한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지나치게 이데올로기화되어 각 국 지도층 엘리트들이 공동체적 정체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각 국 내부에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기 어려우며 신뢰와 정체성 및 미래 평화적 변화에 대한 기대 부족으로 단일화 진행은 심도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다.

### 3. 시사점과 결론

우리는 동북아 단일화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북아 현재의 긴밀한 경제적 연결이 단일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불리한 많은 요소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동북아 각 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하다. 선진공업국(일본), 신흥공업국(한국), 개발도상국(중국),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북한과 몽골)등이 있다. 둘째, 각 국의 정치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극복해 내어 자국의 미래전략을 주도해 나갈 것

54) 肖歡容：『地區主義：理論的歷史演變』，北京廣播學院出版社，2003년，pp.53~58.

인지도 현실적인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본 글에서 현실적인 불리한 요소는 단일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차이로 인한 겉과 적대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현재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심층적 요소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동북아 국가는 국가차원에서든 국민 정서적 차원에서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내 특정 국가의 위협을 느끼며 상호 간에 신뢰감이 부족하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신이 평화적 미래에 대한 만족할 만한 기대를 할 수 없게 한다. 반대로 문화와 각 국의 정치적 요소가 지속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만들고 심지어 해결하기 어려운 안보딜레마를 만들었다. 이러한 나선형의 안보딜레마 모델<sup>55)</sup>은 심지어 심각한 충돌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감정인식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상호 간 신뢰와 존중하는 감정을 만들기 어렵게 한다. 최근 동북아 일부 핵심 국가는 민간차원과 정부차원의 이러한 대립·상호 불신이 결국은 제로섬 게임을 야기시키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공동 편집한 역사교과서 『동북아 3국의 근현대사』는 바로 역사적 감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좋은 시도이다. 중-일 외교부서가 최근 고위급전략대화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도 상대방의 의도를 이해하고 오해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며 실제위기로 격화시키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중-러 국경문제 해결은 어느 정도 러시아 극동지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6자회담이 정례화된 메커니즘이 된다면 이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동북아 각 국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평화적 미래에 대한 기대를 증가시킬 수 있다.

요컨대 동북아 단일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문제, 영토 및 각 국의 문화차이로 인한 정서상의 심각한 대립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지가 향후 단일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의 해결 여부가 단일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55) Robert Jervis(로버트 저비스): 『國際政治中的錯覺與知覺』, 世界知識出版社, 2003년, p.37.



## 한·중·일 대학생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선호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양바오원(楊保筠)

세계경제가 점점 글로벌화 되는 상황에서 정보흐름이 더욱 빨라지고 증가함에 따라 여러 문화 간의 교류와 소통도 종전보다 더 깊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중·일 3국 젊은이,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3국의 미래사회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인식 및 그들의 가치관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또한 이러한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중·일 대학생들의 생각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 베이징대학 아시아 태평양연구센터가 유네스코 베이징 대표사무소의 위탁을 받아 2003년 7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동아시아 청년간의 대화’를 주제로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sup>56)</sup> 1000여명의 중국학생과 한·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인터뷰 및 유네스코가 주최한 ‘세계 철학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한·중·일 대학생들이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정체성 및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문제의 연구결과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를 함으로써 동아시아 사회변천 문제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1.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정

‘동아시아 청년간의 대화’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바로 한·중·일 대

56) 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바오원(楊保筠)의 보고서 내용 참고 : 「促進東亞青年交流, 共謀地區和平發展—聯合國教科文組織 “東亞青年間的對話” 項目的啓示」, 『北京大學亞太研究』 제6집, 香港社會科學出版社, 2004년, pp.241~242.

학생이 동아시아 문화를 인정하는지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데 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최한 많은 연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 행사에 참여했던 한·중·일 청년 대학생들이 동아시아 문화에 비교적 높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중·일 대학생들 모두 동아시아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그들은 한·중·일 3국이 역사적으로 빈번한 왕래와 오랜 문화교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슷한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자를 매개로 하는 동아시아 전통문화를 형성하였고, 이를 통해 한·중·일 3국의 많은 전통문화가 공통점과 유사점을 가지게 되었다고 여겼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한·중·일 3국의 전통문화 뿌리가 같다’에 비교적 높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매우 찬성’ 20.3%, ‘비교적 찬성’ 36%, ‘찬성’ 26.4%로 합계 82.6%를 차지했고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는 11.4%에 불과했다. 그 중 중국 학생들이 ‘3국의 문화가 같다’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앞의 두 항목을 합한 비율이 64%였고, 한국은 54%였다. 반대 입장을 보인 응답자 중, 일본 응답자는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 13.7%, ‘찬성하지 않는다’ 10.9%이며, 중국은 ‘그다지 찬성하지 않는다’ 9.5%, 한국은 11.3%였다. 게다가 질문에 응한 한국과 중국 학생은 ‘찬성하지 않는다’가 거의 없었다.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내용에 대해 일부 일본 학생은 ‘동아시아 문화와 청년의 가치관’을 주제로 한 유네스코 ‘세계 철학의 날’ 행사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은 바로 유교문화라고 밝히기도 했다.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50.9%의 응답자가 ‘동아시아 문화’는 ‘한·중·일 전통문화의 결합’이라고 답했으며,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내용이 ‘한·중·일 전통 문화의 결합’이라고 응답한 한국과 일본 학생은 각각 75.1%와 62%를 나타냈다. 69.3%에 달하는 중국 학생들은 ‘중국 전통 문화’가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이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 학생은 각각 9.9%와 23.5%만이 찬성했다. 이는 응답자들이 동아시아 문화의 핵심내용을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만이 아닌 한·중·일 3국 문화의 결합으로 본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다른 국가의 응답자들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국가 간의 역할이 어떠한지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설문에 응한 대다수는 동아시아 문화는 공동의 조화로운 통일된 생존 방식,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진취적 정신, 이윤과 도덕을 동시에 고려하는 행위준

칙 및 근검절약의 생활신념 등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각 국의 사회 및 3국 간의 국가관계가 변함에 따라 한·중·일 3국 간에 각자 가지고 있는 특유한 문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내용들의 융화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둘째, 조사에 응한 한·중·일 대학생들은 동아시아 문화가 세계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높다고 답했다. 48.9%의 응답자가 동아시아 문화가 세계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35.0%의 응답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로 답해 전체 비율에서 총 83.9%를 차지했다.<sup>57)</sup> 또한 그들도 대부분 동아시아 문화 중에 많은 우수한 전통 관념이 현재까지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문화 중의 인(仁)·효(孝)·예(禮)·의(義)·지(智)·중용(中庸) 등의 전통 관념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에 응한 사람들 상당수가 동아시아 전통문화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상당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응답자 중 44.2%가 ‘뒤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으며, 47.2%가 ‘일부 내용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응답해, 합계 91.4%를 나타냈다. 분석 결과 각 국 응답자들의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의 분포와 3국 응답자들의 전체적인 분포가 일치함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의 국적이 이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sup>58)</sup> 동시에 그들도 동북아 전통문화가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 문화중의 일부 낙후되고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과 개선이 필요하며, 좋은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다는 전제하에 많은 응답자들이 동아시아 문화가 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에 직·간접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다. 많은 응답자들은 동아시아 문화를 동아시아 협력의 기초로 삼는다면 한·중·일 통합에 유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와 풍습이 비슷하며 문화적 배경이 같아서, 문화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 증진과 교류를 추진해왔다.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자원의 교

57) 그러나, 조사에 응한 일본학생들의 반응은 한국과 중국학생들에 비해 약했다. ‘매우 중요하다’가 38.4%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학생들의 비율은 65.2%로 중국학생 44.5%보다 높았다.

58) 예를 들면, ‘시대에 뒤떨어 지지 않았다’로 선택한 중국 응답자 비율은 44.7%이며 일본은 44.3%, 한국은 43.5%이다.

류가 빈번해지고 특히 다국적 기업의 발전과 교류가 더욱 증가하면서 3국 관계도 분명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인터뷰에서 한 중국 학생은 동아시아 문화는 완전한 하나이며 문화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가 동아시아 각 국의 관계를 촉진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는 평화적인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호혜관계를 중시하고 국제관계를 촉진시킨다고 말했다. 일부 일본 응답자는 한·중·일은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이며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 국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한국인도 한·중·일 3국 간의 문화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서양문화와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문화적인 유사성과 공유가 3국 간의 접촉을 매우 쉽게 하여 국가 간의 관계도 용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응답자들의 동아시아 협력전망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에서 특별히 한·중·일 3국 공동 자유무역지구 구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던졌다. 결과를 보면 3국의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분산된 의견을 보였다. '비교적 낙관적이다'와 '보통이다'라는 비율이 각각 38.7%와 37.2%를 차지했다. 중국 응답자들의 '비교적 낙관적이다' 비율이 48.2%, 한국도 42.2%를 나타냈으나, 일본 응답자들은 23.9%에 불과해 동아시아 FTA 구축에 대한 의견에 비교적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sup>59)</sup> 그렇다 하더라도 3국 응답자들은 인터뷰에서 여전히 동아시아 자유무역지구 구축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응답자들은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 경제의 고속성장 및 민주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산된 의견을 보였다. 중국 응답자들은 동아시아 문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가 비교적 낮다고 응답하였지만 한국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중 중국 응답자들은 둘의 관계가 '매우 관계있다'와 '기본적으로 관계가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42.1%이고 일본은 52.5%, 한국이 가장 높은 68.2%를 차지했다.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민주화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의 응답자들은 둘 간의 관계가 '대립과 보완이 병존한다'라는 의견이 비교적 높아 각각 47.8%, 56.2%,

59) 통계조사 결과 29.6%의 일본 응답자들은 동아시아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했으며 이는 중국(13.3%)와 한국(6.3%)보다 높았다. 게다가 일본 응답자들은 '낙관적이지 않다'를 선택한 비율도 6.3%에 달해 중국의 4.3%, 한국 1.2%를 넘었다.

54.4%를 나타냈다. 그러나 한국 응답자들은 이 둘의 관계가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라는 비율이 중국, 일본보다 높은 39.1%를 차지했다. 이는 그들이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민주화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 2. 전통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가치선호 변화

가치관은 문화의 핵심이며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선택할 때의 동력이자, 문화 규범성이 집중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동아시아 가치관의 주요 특징은 가정을 중시하고 사회를 중시하며 인륜을 중시한다. 연구결과 한·중·일 대학생들은 동아시아 문화 가치관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임과 동시에 가치선호에 다양성을 보였다. 첫째, 3국 응답자들은 거의 모두 가정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가정이 사회의 기초라고 생각했다. 34%의 응답자들은 자기 생각과 행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 중 중국 응답자의 39.3%가 특히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국은 38.2%를 나타냈다.<sup>60)</sup>

조사에 응한 3국 대학생 중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가정관계가 조화로운지 여부가 사회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의 화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인터뷰 중 한·중·일 학생도 모두 가정에 대해 특히 손윗사람에 대한 혈육의 정을 표했다. 한 중국학생은 “어른을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며 그분들의 낱고 가르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한국학생은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집에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한 일본학생은 “부모는 자식을 위하지만 자신은 오직 자기 일만 생각한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정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새로운 사물에 대한 생각과 받아들이는 정도가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세대 간에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겼다.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통계에서

60) 그것과 비교해, 일본응답자들은 친구의 역할이 42.3%를 차지했다.

15%의 응답자들이 ‘없다’라고 답했으며 44.3%의 응답자들이 ‘약간 있다’, 21.8%가 ‘보통이다’, 13.4%만이 세대차이가 ‘비교적 심하다’라고 답했다. 이는 세대차이 문제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그 중 한국과 중국 학생은 세대 간에 차이가 비교적 적으며 ‘없다’와 ‘약간 있다’의 비율이 각각 50.7%와 49.0%였지만, 일본은 32.1%에 불과했다. ‘세대 차이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세대 간에 ‘관념 차이’가 세대차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6%를 차지했고 ‘문제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대다수 학생들은 적극적인 교류와 협상으로 세대차이로 인한 문제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하며 대다수 응답자들은 부모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3국 대학생들이 여전히 가정관계의 조화를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의 미래 가정에 대한 설계에 대해 44.4%의 응답자가 결혼상대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체적인 평가’라고 답했으며, 32.6%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 10.7%가 ‘발전 잠재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중 한국과 중국이 51.2%와 45.6%가 ‘전체적인 평가’를 강조했다지만 일본은 36.4%를 차지했다. 자녀 출산 계획에 대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력에 따라 정한다’를 선택한 비율이 비교적 높은 38.9%를 차지했다. 한국 응답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며 ‘두 명’의 비율이 28.5%를 차지했다.

둘째, 한·중·일 3국 대학생은 국가·사회와 인간관계 등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했다. 그러나 일본학생은 많은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의 향후 발전전망에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 응답자 중 19.4%가 ‘매우 낙관적이다’, 56.2%가 ‘비교적 낙관적이다’라고 답했으며 ‘보통이다’는 16%에 불과했다. 한국은 각각 14.2%, 58.8%, 19.8%를 차지했다. 게다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응답자의 태도는 이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그들 사이에는 비교적 비관적인 정서가 강했으며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가 42.9%, ‘낙관적이지 않다’ 20.7%로 그 비율이 거의 60.5%를 차지했다. 젊은이들이 국가의 발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질문에 중국 응답자는 상당히 강한 국가의식을 보이며 67.1%의 사

람들이 ‘우선 국가이익을 고려한다’고 답했으며, 일본 응답자의 45.9%가 ‘개인의 발전’을 강조했다. 한국 응답자들은 특히 ‘개인의 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율이 68.8%를 차지했다. 향후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응답자 중 23%의 학생들이 ‘더 많은 지식을 배워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로 답해 한국과 일본보다 높았다.<sup>61)</sup> 개인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해 3국 응답자의 태도가 상당히 다양했다. 31.4%의 응답자가 ‘공중도덕을 지킨다’, 20.2%가 ‘법과 규율을 준수한다’, 15.9%가 ‘투자 창업’을 준비한다고 답했고, 16%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머지 9.9%는 ‘정치 참여를 준비한다’고 답했다. 그 중 중국 응답자 29.8%가 ‘창업 투자를 한다’고 선택했으며 한국과 일본 응답자는 특히 ‘공중도덕을 지킨다’가 각각 36.9%와 43.4%를 나타냈다. 이와 비교해 중국은 17.2%에 불과했다. 그 외 한국 응답자 중 31.4%가 ‘법과 규율을 준수한다’로 중국(15.5%)과 일본(14.8%)보다도 높았다.

현재 사회상황에 대한 의견에 한·중·일 3국 응답자의 현재의 사회도덕과 풍조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적으로 낮았다. 모든 응답자 중 사회도덕 현황에 대한 평가가 ‘보통이다’라고 응한 비율이 40.1%를 차지했고, 33.5%가 ‘그다지 좋지 않다’, 7.8%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교적 좋다’는 비율은 16.7%에 불과했고 ‘매우 좋다’는 비율도 겨우 2%에 불과했다. 한·중·일 3국 응답자들이 사회풍조와 도덕 상황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일치했다. 예를 들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비율은 각각 29.6%, 32.6%와 38.2%를 차지했고 ‘보통이다’는 비율은 각각 43.2%, 46%와 30.2%를 차지했다. 청년 대학생으로서 3국 응답자 중 61.6%의 사람들이 현재 청소년 범죄의 주원인은 ‘사회·가정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 중 한·중·일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57.1%, 60.2%와 67.7%를 보였다. 19.6%의 응답자가 청소년 범죄는 ‘현대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답했다. 특히 주의할 만한 것은 한국과 중국 응답자 중 청소년 범죄를 ‘전통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0.4%와 11.3%로 일본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질서 유지와 안정에 전통 문화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태환경 보호에 있어 33.8%의 응답자가 환경보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

61) 이 항목에 일본 응답자는 13.7%, 한국은 8.7%이다.

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45.3%가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면서 합계 79.1%를 보였다. 그 중, 중국과 일본 응답자들의 태도가 명확하고 강하여 각각 88.8%와 84.9%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응답자의 태도는 비교적 낮은 61.5%에 불과했고 '보통이다'는 비율도 31.9%에 달했다.

설문에 응한 한·중·일 대학생들 모두 양호한 사회적 인간관계 구축을 중시했다. 연구결과 52.4%의 응답자가 '친한 친구와 동창'이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가장 우선 도움을 청하는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 중 한·중·일 응답자가 각각 52.7%, 61.2%와 41.4%의 분포를 보였다.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아 25.7%의 응답자만이 부모를 도움요청 대상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친구는 현재 동아시아 청년들이 사회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관계 처리에 있어 한·중·일 3국의 응답자 모두 '진심'을 강조하며 각각 34.1%, 47.6%, 27.5%를 보였다.

친구를 선택해 사귄 때, 중국 응답자는 동창과 사귄다는 비율이 87.4%로 비교적 높았고, 한국과 일본은 '사회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서 사귄다는 비율이 각각 13%와 15.7%로 약간 높았다. 65%의 응답자가 친구를 사귄 때 가장 우선시 하는 원칙이 '성격, 취미가 비슷한지'를 보며, 15.5%가 '동고동락'을 친구교제의 원칙으로 삼았다. 그 중 한국과 일본 응답자의 비율이 각각 20.6%와 17.4%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친구를 사귄 때 상대방의 국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한·중·일의 35.8%, 48.3%와 34.2%의 응답자가 '개인 성격과 취미'가 다국적 친구를 사귄 때 중요한 요인이라고 답했다. 그들 중 '상대 국가에 대한 인정'을 친구를 사귀는 요소로 선택한 비율은 20%를 넘지 않았다. 이는 국적은 다국적 교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인터뷰 때 일부 한국과 일본 응답자들이 더 많이 중국 친구와 사귀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일 양국의 청년 간의 교류에 있어 여전히 어느 정도 장애가 있음을 보여줬다.

셋째, 한·중·일 청년 대학생들이 소비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 설문에 응한 한·중·일 대학생 중 70.9%의 학생들이 '자비'로 학비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81.3%, 그 다음이 일본 (67.7%)과 한국(60.7%)이었다. 그들이 일상 생활비는 주로 '부모가 준다'는 비율이 75.2%를 차지했고, 그 중 중국 응답자가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83.3%를 차지했다. 한국과 일본 응답자는 자신의 아르바이트로 해결한다는 비율이 각각 10.6%와 15.5%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주요 거주지는 단체 기숙사로 그 중 중국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83.1%를 차지했다. 학교 외 임대거주는 11.7%에 불과했으며, 기본적으로 여러 명이 모여 같이 살았다. 일본 응답자는 단체 기숙사 거주가 67.0%였고 이와 대조적으로 53.6%의 한국 응답자가 단체 기숙사에 살며, 혼자 임대 거주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24.0%에 달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모여 산다는 비율도 17.2%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5.7%의 학생들이 물품구입 시 '실용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응답자의 이 항목 비율은 67.3%로 일본의 46.2%와 한국의 50.8%보다 높았다. 그러나 브랜드 선호도는 한국과 중국이 일본 2.7%보다 높은 9.9%와 10.2%로 나타났다. 그 외, 한·중 응답자 보다 높은 25.8%의 일본 응답자가 가격요소를 강조한다고 말했다.

여행은 현대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생활방식과 소비가 되었다. 65.6%의 중국 응답자가 중국 3개 이상의 성(省)·시(市)에 가본 적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비율은 각각 44.6%와 64.6%를 나타냈다. 중국 내 여행의 주목적에 대해 모든 응답자가 '여행·관광'을 꼽아 61.8%를 나타냈으며 15.3%가 '사회경험을 높이기 위해', 11%가 '모험'이라고 답했다. 그 중 중국 응답자가 '여행·관광'이 주요목적이라는 비율이 72.7%로 가장 높았다. 일본 응답자 중 여행 목적이 주로 '모험'이라고 답한 비율이 21.6%로 가장 높았다.

대중매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영화·텔레비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택에서 66.9%의 일본 응답자가 일본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며 미국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비율은 20.8%를 차지했다. 한국 응답자는 자국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비율이 81.8%를 차지하였고, 미국 프로그램은 10.3%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 응답자는 미국의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는 비율은 36.6%에 불과했다. 응답자가 영화·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목적은 각 국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중국 응답자는 '오락, 편안함'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느낌'을 얻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42.1%와 48.3%로 나타났다. 일본 응답자는 비율이 55.0%로 한국과 중국보다 높았다. 한국

응답자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라는 비율이 34.6%로 높게 나타났다.

문학작품 읽기에서는 한·중·일 3국 응답자 모두 가장 먼저 자국 작품을 선택해 읽으며, 그 비율은 각각 65.8%, 73.5%와 63.9%로 나타났다. 이는 각 국 응답자가 비교적 자국 작품을 편애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족정서, 전통문화와 언어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작품을 읽는 주목적'에 대해 중국 응답자는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73.3%로 나타났으며, 한국도 50.0%에 달했다. 일본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42.2%를 차지했다. 그 외 조사결과도 현재 한·중·일 대학생들이 점점 자신의 가치를 중시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중·일 3국 응답자 중 자신의 인생이상을 '개인의 가치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과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비율이 각각 38.2%와 28%를 나타냈다. 그러나 42.1%의 중국 응답자가 '개인의 가치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비율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36.9%)보다 높았다. 일본 응답자의 의견은 비교적 분산되었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49.3%)이었으며, 한국 응답자는 더욱 분산되어 각 선택 사항의 비율의 차이가 모두 중국과 일본보다 적었다.<sup>62)</sup>

배움의 최종 목적이 '개인의 소양을 높이고, 아름다운 미래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는 데 한·중·일 각각 65.7%, 78%와 72.4%로 높게 나타났다. 3국 학생 중에서 한국 학생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괜찮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가장 높은 16.1%로 나타났으며, 11%의 한국 응답자가 배움의 목적은 '학위를 얻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라고 생각했다. 또한 졸업해 일을 하기 전에 인턴 경험을 쌓는 것에 각각 27.7%, 29.3%, 30.9%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 외, 48.7%의 중국 응답자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17.3%의 일본 응답자와 11.9%의 한국 응답자가 취업하기 전에 '서둘러 여행을 간다'고 답했다.

3국 청년 대학생들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다. 44%의 중국 응답자는 '계속해서 학문을 연구한다'고 답했으며, 한국과 일본 응답자는 '창업'을 한

62) 한국학생은 이 두 항목의 비율이 각각 30.2%와 27.9%로 나타났다.

다는 비율이 31.8%와 34.1%에 달했다. 한·중·일 3국의 응답자들이 졸업 후 공무원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10.3%, 11.7%, 1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종교 신앙에 있어 84.5%의 중국 응답자와 64.6%의 일본 응답자가 종교 신앙이 없다고 한 반면 한국 응답자는 다소 낮은 26.7%에 불과했다. 20.5%의 일본 응답자와 22.8%의 한국 응답자의 종교가 불교이며, 한국 응답자 중 기독교의 비율이 32.3%, 천주교의 비율은 16.6%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의 종교 신앙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신앙의 목적이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라는 비율이 각각 51.6%, 37.3%, 19.1%로 나타났으며, '정신적으로 기댈 곳을 찾기 위해'라는 비율도 각각 32.8%, 50.2%와 34.1%를 차지했다.

개인의 발전 전망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매우 낙관적이다'와 '비교적 낙관적이다'의 비율이 각각 73.9%와 77.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응답자 중 23.3%의 사람이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여겼으며, 12.5%의 사람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해 매우 비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 3.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선호에 대한 문제

'동아시아 청년간의 대화' 프로젝트 연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세계화의 물결이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를 휩쓸면서 동아시아 청년 대학생들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선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선택해 나가고 있었다.

우선, 3국 청년 모두 세계화라는 큰 배경 하에서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을 유지함과 동시에 외래문화 중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여겼다. 3국 청년 모두 동아시아 전통문화가 3국에서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지만 동시에 역외 문화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세계 철학의 날' 좌담회에서 한 일본학생은 인터넷의 보급과 잦은 교류로 동아시아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3국의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문화 가치관을 계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래문화 요소도 흡수해야만 현대화 사회 발

전에 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도 3국 청년 대학생이 서구문화 특히 미국 문화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다. 미국 대중문화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53.9%의 응답자가 할리우드 영화라고 답했다. 그 중 한국과 중국 응답자가 각각 63%와 56.8%로 나타났다. 그러나 36.4%의 일본 응답자는 미국식 패스트푸드점이라고 답했으며 이 비율은 한국과 중국의 비율보다 많이 높았다.<sup>63)</sup>

그 외, 일부 응답자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표하는 한편 해외이민을 선택하기도 했다. 3국의 응답자 중 41.2%의 사람이 졸업 후 이민을 생각하고 있으며, 20.7%의 사람만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 중 중국 응답자가 ‘졸업 후 이민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전체 51.2%를 차지했다.<sup>64)</sup> 일본 응답자는 ‘일찌감치 이민을 계획했다’는 비율이 29.4%였다. 한·중·일 응답자 중 이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각각 25.1%, 22.4%, 12.9%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일본 응답자가 이민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한국과 중국 응답자에 비해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민의 주목적에 대해 44%의 응답자가 ‘건문을 넓히기 위해’라고 말했으며, 3국의 비율은 각각 42%, 44%와 47%로 비슷했다. 한국과 일본 응답자 중 각각 22.5%와 21.4%의 사람이 ‘해외에서 더 좋은 일자리 기회를 찾기 위해서’라고 답했고, 중국은 19.4%를 나타냈다.

서양 문화와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한·중·일 대학생들은 일부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위배되는 서양의 생활 방식과 사상에 대해 점차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은 독신자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깨어있었으며, 그 중 일본 응답자가 높게 평가하며 ‘매우 이해한다’는 비율이 28.3%, ‘기본적으로 이해한다’가 41.7%, ‘이해할 수 있다’가 22.9%를 차지했으며 한국과 중국 응답자도 수용적인 입장이었다. 남녀 문제에서 응답자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다. 모든 응답자 중 26.8%의 사람이 ‘완전 이해한다’, 32.1%가 ‘기본적으로 이해한다’, 31.6%가 ‘이해할 수 있다’로 답해 세 항목을 합치면 89%에 달했다. 그 중 일본 응답자의 ‘완전히 이해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39.8%로 나타나 가장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응답자의 비율은 각각 13.1%와

63) 이 항목을 선택한 한국 응답자 비율은 14.8%, 중국 응답자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64) 그 외, 12.8%의 중국 응답자가 ‘일찌감치 이를 계획했다’고 답했으며, 11.6%의 사람이 ‘현재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27.1%였다. 외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 20.5%의 응답자가 ‘정상적인 현상이며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28.2%의 사람이 ‘이해하기는 하지만 전통도덕에 위배 된다’고 했으며, 13.4%의 사람이 이것은 ‘사회 불안정을 조성하는 이기적이 행위’라고 답했다. 하지만 ‘동기에 따라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4.1%에 달했다. 게다가 한·중·일 3국 응답자의 이에 대한 의견이 기본적으로 같았다. 비록 동성애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산된 의견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관용적인 입장이었다. 28.6%가 ‘이해할 수 있다’, 24.2%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2%가 ‘이해하기 어렵다’, 14.8%가 ‘이해 할 수 없다’, 10.2%가 ‘완전히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가 동성애에 대해 취한 관용적 태도는 주로 타인에 대한 것이지 자기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각 국의 상황으로 볼 때 일본 응답자는 동성애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 비해 개방적이어서 앞의 두 항목을 합한 비율이 47.6%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응답자는 경제 글로벌화와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서양 문화의 충격을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일부 전통문화는 이미 청년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어서 특히 청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동아시아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한·중·일 3국은 서로 다른 고유문화와 이데올로기·정치제도를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 수준과 생활습관도 달라서 청년 대학생이 동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 한·중·일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3국 문화에 공통점도 있지만 각자의 특징도 있다고 여겼다. 많은 응답자가 한·중·일 3국이 유교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다른 점이 있으며, 게다가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정도도 다르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일상생활에서 유교 문화적 요소는 많지 않지만, 졸업·결혼·의식 등의 공식장소에서는 여전히 비교적 두드러진다. 일본과 한국은 유교문화의 형식과 정신적인 면이 비교적 완전하게 보존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교육 분야에서는 중국만큼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많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교육방식·학습전통·가정생활·사회관계 분야에서 한·중·일은 각각의 특징을 보였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중국의 남성과 여성은 비교적 평등하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남존여비 전통이 남아있으며, 한국 여성의 생각은 더욱 독립적이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 청년간의 대화’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중·일 청년대학생 모두 동아시아 문화의 객관적 존재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 문화는 3국의 공동자산이며 3국이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겼다. 동아시아 지역은 현재 경제 글로벌화와 역사적인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사회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상황에서 특히 시장경제의 커다란 발전과 외래문화의 대량유입은 현재 3국 청년 대학생의 가치관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자라고 배우며 일을 하는 지식청년으로서 동아시아 전통사상의 가치관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한·중·일 3국 교류와 협력 촉진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 한·중 국제결혼의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적 충돌

연변 대학교 민족연구소 권신즈(全信子)

개혁개방 후 중국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의 배우자로 언어가 통하고 민족의 뿌리가 같은 한국 남성을 주로 선택하는 데는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문화와 한국 문화 간의 차이점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해 생활하는 조선족 여성들이 타국 생활에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1. 한·중 인적교류와 국제결혼의 발생

국제정세와 냉전체제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 후 한동안 한·중 간의 교류는 차단된 상태였다. 국제정세가 완화되며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행함에 따라 양국은 1978년부터 인적교류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입국 동의서를 근거로 조선족에게 단기 한국 방문 혹은 영구 정착을 허가했다. 한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 중국 조선족이 한국에 영구 정착한 수는 4가구 6명, 단기 친척방문 2가구 2명, 1981년 영구 정착 20가구 23명, 단기 귀국 2가구 2명, 1982년 영구 정착 20가구 23명, 단기 귀국 14가구 20명으로<sup>65)</sup> 1981년부터 한국 방문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1981년 25명, 1982년 390명, 1986년 690명, 1987년은 800명까지 늘어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방문자 수는 1300명까지 증가했다.<sup>66)</sup>

1984년 4월 28일 대한적십자사 유창순 총재는 중국 정부에 한·중 이산가족 상

65) 1983년 5월 7일 『동아일보』 (한국).

66) 1989년 1월 19일 『동아일보』 (한국).

봉을 위한 양자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sup>67)</sup> 같은 해 5월, 재일교포 김재봉 씨가 한·중 이산가족 상봉의 첫 사례로 중국에 사는 형을 방문했다.<sup>68)</sup> 그 후, 이산가족 만남이 점점 많아졌다. 물론, 그 전인 1980년 이후부터 1983년 5월까지 이미 23명의 한국인이 운동경기참가, 사업, 친척방문 등의 이유로 중국을 방문했다.<sup>69)</sup>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는 더욱 빈번해지며 한국기업의 중국투자·공장설립과 중국 조선족의 한국 유학·취업·친척방문 등은 더욱 확대되었다.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만 예로 본다면 1986년 연변에 온 한국인은 겨우 27명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1000명, 1994년에는 5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1995년 1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무려 8만 명으로 급증했다. 1989년 연변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투자 설립한 회사가 생긴 후, 1991년에는 60개 기업, 1992년에는 200개 기업, 1994년에는 기업체 수가 무려 400개까지 급증했다. 현재 연변에 상주하는 한국 유학생, 기업과 주재사무소 직원은 2000여명에 이른다.<sup>70)</sup>

중국 조선족의 한국 방문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방문 목적은 연변 조선족의 예를 들면, 8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친척방문, 80년대 후반부터 1992년 한·중 수교 전까지는 한약재 판매·외화벌이였지만, 1992년 수교 이후부터는 개인 노동력 수출이 주가 되었다. 1차 통계에 따르면 1988년 들어 연변 조선족의 한국 방문자 10만 명 중 공무상 출국이 5000명 정도였고, 민간단체 출국이 연 1만 명, 그 나머지는 개인적 출국이었다.<sup>71)</sup>

한국과 조선족 간의 갇은 왕래는 한·중 국제결혼의 유리한 계기가 되었다. 같은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부유한 한국의 생활조건, 한·중 노동임금의 격차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 조선족 여성들을 매혹시켰고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배우자 선택 목표를 한국으로 맞추면서 국제결혼이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했다. 연변 한 지역만 예로 들면(표1), 한국으로 시집간 조선족 여성은 1990년에 12명, 1991년 26명, 1992년 45명, 1993년에는 602명으로 증가했다.<sup>72)</sup>

67) 1984년 4월 30일 『조선일보』 (한국).

68) 1984년 5월 30일 『산케이 신문』 (한국).

69) 1983년 5월 8일 『한국일보』 (한국).

70) 金鐘國: 「解放後延邊朝鮮族對外交往의歷史和現狀」, 延邊海外問題研究所編 『交流與思考』, 延邊人民出版社, 2002년, pp.230~231.

71) 金鐘國: 「解放後延邊朝鮮族對外交往의歷史和現狀」, 延邊海外問題研究所編 『交流與思考』, 延邊人民出版社, 2002년, p.231.

72) 연변 조선족자치주 문서보관소 파일 No,137, 파일명칭: 자치주 국제결혼 처리.



표 1 연변 지역 국제결혼 기본상황 통계표 (1994년~2001년 1월)

단위: 명

연 도	합 계	결혼상황			직업상황			국적		
		미혼	이혼	미망인	간부	생산직	농민	한국	일본	기타 국가
1994	829	472	334	23	30	506	293	760	57	12
1995	2077	1026	866	185	71	1544	462	2012	48	17
1996	2462	1413	815	235	86	1754	623	2325	112	26
1997	3066	1662	1002	402	79	2398	589	2898	147	21
1998	2348	1084	937	327	14	2152	182	2142	194	12
1999	1467	691	639	137	841	525	101	1239	197	31
2000	1954	1009	783	162	25	1516	415	1635	268	51
2001	257	115	119	23	1	181	75	229	22	6

자료출처: 연변 조선족자치주 민정국 제공.

## 2. 한·중 국제결혼 중의 문화적 정체성

중국 조선족은 과계민족(跨界民族: 주변 국가로부터 국경을 넘어 들어온 소수 민족)이다. 한반도의 조선인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들어온 것은 명나라 말·청나라 초부터이며 이는 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청나라-중화민국-만주국(滿洲國)에 이르는 300여 년 동안의 긴 시간이었다. 조선족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들어온 것은 대체적으로 다섯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시기는 명나라 말·청나라 초로 이 시기에 중국으로 들어온 조선족 대부분은 전쟁포로였다. 두 번째 시기는 청나라 강희제(康熙帝)때부터 1910년까지 ‘이주금지령’이 내려졌던 시기로 몰래 들어온 그들은 대부분 한반도 북부지역의 ‘이재민들’이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10년 ‘한일합방’부터 1919년 ‘3.1운동’ 발발까지로 이 시기에 들어온 조선인은 대부분 몰락한 농민이었다. 네 번째 시기는 ‘3.1운동’부터 ‘9.18 사변’까지로 이 시기에 들어온 조선인은 일본에 반대하는 독립운동지사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에 불만을 품은 조선의 농민들이 대부분이었다. 다섯 번째 시기는 만주국 시기로 이때 들어온 조선인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조선 개척민들이다. 중국 조선족이 이주해서 점차 중화민족이라는 큰 틀 안의 한 구성원으로 변하는 데는, 어느 정도 역사적 과정과 정치배경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 조선족은 중화대지에 수백 년 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형제민족과 함께 동북 국경지역을 개발·보호·건설하고, 사회주의 건설 등에 동참하며 중국에 대한 귀속감·정체성·애국주의 정신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이미 중국 국내 다른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 중화민족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한편 중국 조선족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지금도 민족적 근원·언어·문자·풍습·가치윤리·예술 등 분야에서 원형에 가깝게 전통요소들을 보존하고 있다. 비록 중국이 개혁개방 전 한국과는 서로 차단된 상태였지만, 그러한 이유가 한국과 얽혀있는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진 못했다.

중국 조선족과 다른 민족이 결합해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형성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원형에 가깝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존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취한 올바른 소수민족정책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우선, 역사적으로 조선족의 이주지역인 동북지역은 조선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나라가 출입을 금지한 지역(封地)이었다. 때문에 이 지역은 경제적 환경이나 문화적 환경 모두 상당히 척박했다. 중국 문화의 주체 민족인 한족(漢族)의 동북지역 진출도 비슷한 동기와 시기에 진행되었다. 동북지역의 광활한 대지와 풍족한 천연자원은 다른 민족 간의 경쟁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조선과 중국의 정치 환경 및 활발한 인적교류도 객관적으로 조선족의 고유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다음으로 중국과 한반도는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면서 중국 문화가 고대 조선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양국 문화가 갖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조선족은 중국으로 들어온 후에도 눈에 띄게 다른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족의 중국 이주는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치적 요인에 따른 것이며, 혹은 경제적 이유, 혹은 일본에 대해 나라를 구하려거나 일본의 강제이주에 따른 결과이지 조국과 민족을 등지려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을 가로막던 두꺼운 얼음이 깨지고, 상호왕래가 회복되자 조선족은 자연스레 한국문화에 대한 익숙함과 정체성이 생겨났다. 한·중 양국 간 수교 이후 한국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같은 뿌리를 가진 문화에 대한 회상·회귀와 정체성을 불러일으켰고, 조선족의 잃어 버렸던 많은 문화가 다시 복원되었다. 이것은 조선족 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는데 풍부한 정신적 문화

기반을 다져놓으면서 또한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의 배우자로 한국인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민족에 대한 관심·사랑도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행을 선택한 엔벤인 8만 명 중 90%이상이 한약재 판매,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 만약 한 사람당 3000달러를 번다고 한다면, 2억4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이다. ‘한국행’만으로 엔벤 조선족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30만 조선족이 부유해졌다. 현재 엔지(延吉)시 외화 총보유액은 6000여만 달러로 이는 조선족 1인당 300달러에 달하는 것이며 전 성(省)을 통틀어 최고수준이다.<sup>73)</sup> 이러한 소득은 물론 한국인의 배려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가자 한국의 친척이 3000달러를 쥐서 중국으로 돌아와 가게를 차리고, 어떤 사람은 한국 친척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1만여 달러를 벌여 중국으로 돌아와 집을 샀다는 이야기는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sup>74)</sup>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조선족을 동포라 부르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다. 이것이 조선족들로 하여금 의타심이 생기게 하여 한국만 가면 여러모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으며, 특히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의 배우자로서 한국남성을 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필자는 한국 서울시 및 인천시에서 한국에서 결혼해 생활하는 30명의 조선족 여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 중 16명의 여성이 한국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주 이유가 민족문화의 동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례 1: 한국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노 씨: “제가 한국에 시집온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낯설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일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데 소개로 일본으로 시집갔어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게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정적인 교류를 하죠? 일본이 아무리 발전하고 잘 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정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 감정적인 교류가 없다면 결혼생활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 잘사는 나라에 시집가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남자를 선택한 것은 언어가 통하고

73) 金鐘國: 金鐘國: 「解放後延邊朝鮮族對外交往的歷史和現狀」, 延邊海外問題研究所編『交流與思考』 延邊人民出版社, 2002년, pp.233~234.

74) 韓相福, 權太煥 (한상복, 권태환): 『中國延邊朝鮮族社會的結構與變遷(중국 연변의 조선족(사회)의 구조와 변화)』, 漢城大學校出版部(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년.

생활습관도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어쨌든 같은 민족이어서 한국으로 시집오면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가 국제결혼을 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남자를 선택한 이유예요.”<sup>75)</sup>

사례 2: 한국 동대문구에 사는 오 씨: “저와 지금의 한국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다르다면 뭐랄까, 그 사람이 저보다 아는 게 많은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보다 아는 것도 많고 말투나 행동거지 모두 매우 예의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한눈에 반한 거죠. 사귀면서 저는 많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우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조선족은 음식문화가 한국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오리지널은 아니죠. 김치 담그고 된장찌개 끓이는 게 다 순서가 있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우리네 음식은 무슨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같은 음식인데도 맛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양국 간 경제·문화 교류를 더욱 빈번하게 만들었고, 우리 조선족이 잃어버렸던 많은 문화를 복원시켰어요. 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일종의 친밀감과 익숙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남자와 결혼할 때 마음도 편안했어요.”<sup>76)</sup>

사례 3: 한국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손 씨: “저는 중국 국민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시집 올 때 왠지 모르게 한국을 외국으로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가 아직도 한국 경상도에 있고 저의 배다른 언니도 한국에 있어서요. 그리고 한국에 저의 아버지 호적이 아직도 있다고 들었어요. 만주국 시기 때 저의 아버지 혼자 중국 동북지역에 오셨다가 1945년 광복이 되고 그 후에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나뉘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셨어요. 저는 제 두 눈으로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 가족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본적이 있는데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소개받은 한국 남자가 마침 아버지 고향 사람이었는데, 의외로 친밀감과 익숙함을 느꼈고, 우리 두 사람의 이야깃거리가 더 많아졌지요.”<sup>77)</sup>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 여성이 한국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오면서 낯설고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75)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노(盧) 여사, 36세, 2005년 9월 11일, 서울시 노원구 가리봉동.

76)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오(吳) 여사, 30세, 2005년 5월 6일, 서울시 은평구 녹번 MEKA오피스텔.

77)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손(孫) 여사, 45세, 2005년 9월 19일, 서울시 노원구 신흥동.

### 3. 한·중 국제결혼의 문화적 충돌

비록 민족의 문화적 연결과 문화적 정체성으로 한·중 간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했지만 이러한 결혼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많은 조선족 여성의 결혼동기가 불순해, 결혼을 가난을 벗어던질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해외정착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결혼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며 이에 더해 문화적 충돌도 한몫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족 여성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이 대개 타협 혹은 억지로 유지되거나, 심한 경우 가출과 이혼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했다.

#### 1) 가치관의 차이

한 민족의 문화는 정적이고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조선족이 점차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어가는 300여년의 역사 과정 동안 그들은 현지 민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발전하며 한족과 다른 민족의 문화를 수용하고 조화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해 왔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중국 조선족은 한족과 그 밖의 다른 민족과 함께 공동의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 민족성격·언어문자·생활방식·풍습 등에 있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공통점이 점점 많아졌다. 중국 조선족 문화는 한국문화와 뿌리가 같으면서도 한국 문화와는 다르다. 조선족 여성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활했지만 한국 남성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활했다. 그들은 언어가 통하고 풍습은 같았지만 가치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사례 1. 한국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김 씨: “한국에 와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남녀 월급차이와 회사의 상하관계였어요. 피고용 관계였기 때문에 그 차이가 확연히 달랐어요. 아랫사람은 상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절대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집에

서도 남녀의 지위도 달랐어요. 예를 들어 가족 제사가 있으며 여자는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자와 같이 절도 하지 못하고 이런 불평등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sup>78)</sup>

사례 2. 한국 인천시에 사는 강 씨: “중국 여자는 중국 국내에서 우대를 받아요.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를 받고 나중에 아이를 탁아소에 보낼 수 있고 회사에서도 많이 배려해줘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실업자가 돼서 배려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국가의 배려로 일만 하면 먹을 게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자신의 노력에 기대야 해요. 만약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요.”<sup>79)</sup>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중국도 고용관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기관과 공공사업부문의 남녀 간 혹은 회사 상하관계는 평등한 동지적 관계를 강조한다.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은 조선족 여성이 한국에 온 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자신은 중국인이고 한국인은 조선족을 동족의 이방인으로 본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체제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비록 언어는 같지만 각자 자신은 다른 국가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가 발전해 있어 조선족 스스로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은 우월감과 중국 조선족을 경시하는 심리적 요소들이 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이혼 후 귀국해 자신의 동창, 친구, 동료 등 다른 남성과 재결합하는 조선족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사회제도가 같고, 가치관이 같으며 생활습관이 같은 조선족 남성과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마음도 더 편하다는 것이다.<sup>80)</sup>

## 2) 가정문화의 차이

유교문화가 지배하던 전통사회에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여성은 가정에서 주부의 역할을 담당했다. 딸·아내·어머니는 여성으로서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이

78)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김(金) 여사, 39세, 2005년 4월 1일, 서울시 종로구.

79)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강(姜) 여사, 34세, 2005년 4월 25일, 인천시 연수구 옥연동.

80) 2005년 2월 12일, 『吉林日報』.

었다. 한국에서 일을 포기하고 가정주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절대다수의 여성이 결혼 후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며 재능의 정도를 막론하고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일반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남녀평등사상의 영향으로 여성이 집에서 나와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남성과 똑같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았다.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조선족 여성은 특히 국가와 사회의 더 많은 우대와 보살핌을 받았다. 지금도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일을 하며,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러한 사회배경에서 자란 조선족 여성은 한국에서 결혼해 생활하면서 전업주부의 역할에 적응하기 힘들다. 그 외, 한·중 양국의 가정생활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 한국남성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례 1. 한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오 씨: “한국에 와서 가장 적응이 안됐던 것이 바로 가정문화의 차이예요. 한국은 가정의 예절의식이 너무 많아요. 특히 부모와 같이 살면 매일 아침저녁으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고 매 끼니마다 부모님께 먼저 음식을 차려드려야 하는 것 등이 가장 기본 예의죠. 한국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큰 가족의식인데, 만약 장자이면 1년에 10여 차례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여자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도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참석해야 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안 가면 안 되냐고 묻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러냐고! 이것은 가족 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서 며느리로서 어떻게 안 가냐고 하는 거예요. 이 뿐만 아니라 한국 가정 내에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 깊어요. 무슨 장자네, 큰 손자네 하면서 남자는 여자보다 귀한 대접을 받아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아주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지휘대로 움직이고, 남자의 말 한마디를 마치 신이 하는 말 같이 따라야 하는 가부장제도가 아주 완고해요. 이런 가족구성원간의 불평등으로 조선족 여성의 원성이 자자해요.”<sup>81)</sup>

한국과 중국은 모두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한다. 비록 공자가 중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한국의 유교문화 보존은 그야말로 청출어람으로 중국을 뛰어넘는다. 중국은 10년의 ‘문화대혁명’과 ‘비림비공(批林批孔)’운동을 겪으면서 유학이 설 자

81)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오(吳) 여사, 28세, 2005년 4월 17일, 서울시 MEKA오피스텔.

리를 잃어 버렸다. 최근 몇 년간 개혁개방 시행과 국가정책의 중심의 바뀌면서 사람들이 경제발전에 주력하며 유교문화는 잘 발휘되거나 계승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전통문화가 비교적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 전국적으로 ‘배우고 우수하면 관직에 나간다(學而優則仕)’는 전통 관념이 흐르고 있으며 가족 내 예절·의식 문화도 질서가 있다. 그러나 조선족 여성은 자신을 가정이라는 작은 테두리에 가두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특히 남자의 휘둘림에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한국남성이 조선족 아내를 맞아 생기는 갈등의 주된 이유이다.

사례 2: 한국 서초구에 사는 이 씨: “저는 한국에 시집온 후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면서 마치 식모와 다를 바 없었고 바깥세상은 저에겐 너무 낯설었어요. 저는 한국에 시집올 때 편안한 생활을 상상했고, 특히 선진 과학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생활영역은 좁아서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제 남편은 제가 문 밖에 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사회 활동 참여도 못하게 해요. 그 사람은 돈만 벌어요. 저는 집에서 그냥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sup>82)</sup>

한국 가정 내 여성의 단조로운 역할과 중국 조선족 여성의 이중역할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로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외롭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 3)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오해

조선족 여성이 국제결혼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 바로 한국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낙원’으로 여기며, 한국만 가면 돈이 절로 들어오고 생활의 여유가 있어 무슨 일도 쉽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선족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온 후, 전에 가졌던 달콤한 꿈은 일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모든 것이 기대했던 것과 큰 차이가 나면서 마음의 평형을 잃게 되어 생활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일부 조선족 여성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할 때 그들이 의·식·주·오락을 모두 충족시키는 안식처 혹

82)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이(李) 여사, 32세, 2005년 4월 17일, 서울시 MEKA오피스텔.



은 자신과 가정생활의 의지할 곳을 찾으려는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되지 못할 때는 각자의 길을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외, 중국에서 자란 조선족 여성은 오랫동안 국가의 배려를 받으며, 그들 중 많은 여성들이 일을 할 때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모든 것을 기대지 않아도 정부의 보살핌으로 살 수 있었다. 그래서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서는 생활이 부담이 없고 일도 느슨했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긴장의 연속이고 다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도 자신이 먹은 것은 자기가 내야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인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는 생각에 반감만 생기게 됐다. 그들은 시장경제 체제하의 한국에서 1원도 쉽게 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적응 못한다.

사례 1: 한국 인천시에 사는 김 씨는 한국에 온 후 생활여건이 생각했던 것만큼 이상적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고시원으로 이사해 계속 돈을 벌 생각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과 한 평생을 같이 살 생각 없어요. 그냥 한국생활이 중국보다 낫다고 해서 이곳에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생각지 않게 집도 임대고 남편도 무능력하고요. 그래서 돈만 많이 벌고 나면 헤어질 거예요.”<sup>83)</sup>라고 말했다.

사례 2: 한국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최 씨: “저의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아요. 결혼 전에는 자주 선물도 사주고 잘 해줬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렇지 않고 돈도 조금 밖에 안 갖다 줘요. 사실 그 사람 사는 것도 그다지 여유가 있지는 않아서 저도 결혼을 계속 유지할 생각은 없어요.”<sup>84)</sup>

개혁개방 이후 문화적 동질성과 익숙함,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 언어적 장애와 생소함이 없다는 이유로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사회제도, 가치관과 가정생활 형태 등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 남성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능동적인 선택,

83)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김(金) 여사, 51세, 2005년 4월 15일, 서울시 은평구 고시원.

84) 「中國朝鮮族女性訪談錄」, 최(吳) 여사, 27세, 2005년 4월 1일,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조선족 여성의 수동적인 맞선·승낙 및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 간 결혼 목적의 차이로 인해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조선족 여성은 한국에서 문화적 동질감에서 문화적 충돌, 동경과 흥분에서 막막함·낙담·실망감을 느끼며 고통스럽게 타국에서 힘겨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조선족 여성에게 상상속의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 많은 인내심, 타협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